

국회보

Since 1949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Vol. 653



2021. 04

듣다



다이내믹, 의정

세상을 변화시킬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
국회가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06



30



32



34



38



40



42

국회보

2021 April vol.653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1년 4월 1일

발행인 이춘석 국회의사총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전상수 위원장(입법차장)

이승재 위원(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동하 위원(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위원(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선춘 위원(기획조정실장)

이상현 위원(법제실장)

한웅현 위원(문화소통기획관)

박기현 간사(문화소통담당관)

국회보편집실무위원회

제방훈(보좌관), 한주연(비서관), 하상우(서기관)

편집실무진

글 김현아(취재보도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문화공감 02)2266-1897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

세상을 변화시킬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04 지금 국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 개최
박병석 국회의장,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면담
박병석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
국회, 'LH사태 재발 방지법' 등 177건 안건 의결, 15조 원 규모
추경안도 처리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회의 개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
'따릉이(공공자전거) 타고 국회를 누비세요!
'온라인 국회 참관서비스' 시작

특집 _ 반복되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방안

20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유형과 특성 분석 _ 강지영
코로나19 시대의 아동학대 _ 이윤호
학대아동 보호 위한 인프라 구축해야 _ 공혜정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향 _ 류경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국회의 입법 대응 _ 신형진

30 상임위 여야 간사에게 듣는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 다할 것” _ 박 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의 국가 정책 우선순위 높일 것”
_ 이달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34 길에서 길을 찾다 _ 강대식 의원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품은 도시, 대구 동구

38 칭찬합시다 _ 이탄희 의원
“평등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40 의원의 좌우명_ 양기대 의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

42 나의 인생 나의 정치 _ 서정숙 의원
“건강한 대한민국 만드는 '사회 약사' 될 것”

44 특별기고
아크부대, 열사의 땅에서 찾은 국군의 가치 _ 김병주 의원

46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스포츠 폭력,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52 새 법률 소개
국회, 'LH사태 재발 방지법' 등 의결

64 법률 시대를 읽다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_ 차인순

66 국회 주재관 리포트
일본의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디지털청 신설 논의 _ 최은규

70 기고
'정책'을 '법'으로 만드는 입법의 장인(匠人) _ 조승래

74 법 시행 그 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76 만화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을 마련합니다

78 위원회는 지금
국회, LH 투기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주제로 공청회

84 국회 뉴스

92 국회 사람들
“국회 역사의 기록자로서 책임도 막중하고 보람도 커요”

94 새로 읽는 중앙아시아사
실패를 기회로 바꾼 불굴의 중앙아시아 국가, 월지 _ 이광태

98 수목원 탐방
바다향기수목원

102 바이러스의 역사
북미 원주민들을 파멸시킨 '천연두' _ 도현신

104 국회 미술관
과학예술의 최전선에서 _ 김준기

107 국회의 풀꽃과 나무 이야기
봄의 전령사, 히어리

108 오천 년의 숨결, 우리 유물을 찾아서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_ 이광표

112 대한민국 문학기행
4월의 숲길에 자유의 꽃으로 피어난 시 _ 장태동

116 생활 속 우리말글
이제는 동사를 바꾸세요 _ 김형주

117 정치 관련 주요 일지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 개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월 4일 오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월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현안을 논의했다.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양당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적기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인식

을 공유하고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병석 의장은 양당 대표에게 국회세종지사당 건립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으며, 개헌의 필요성, 세월호 특별검사 도입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



박병석 국회의장,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면담 “공직자 등 부동산 투기 관여 근절해야”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비교섭단체 의원 대표들이 3월 17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에게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신속 추진을 위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강 비상대책위원장, 박 의장,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은 3월 17일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4인과 면담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이렇게 국민의 상실감이 클 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특히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범위를 직무상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내

부정보 활용으로 범위를 넓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적어도 공직자 또는 관련된 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관여하는 것은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박 의장에게 ‘LH 투기 의혹 국회의원 전수조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전달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



박병석 국회의장이 3월 19일 국회영상회의실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화상회담을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월 19일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의장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며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면서 “양국

의회가 한미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화답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박 의장은 “북핵 문제는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화상회담을 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실을 직시하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마련해 외교적 관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의 관점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미국의 정책 논의 및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중요한 가이드라인(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펠로시 의장이 하원의장 취임 직후인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H.Res.121)과 작년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채택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2007년 당시 마이클 혼다(Michael Honda)의원이 주도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해당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화상회담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메를린 스트리랜드(Marilyn Strickland) 연방 하원의원도 참석했다. 스트리랜드 의원은 “한미관계는 무역, 안보, 경제적 기회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 의회 내에서 한미관계 강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회담은 오전 6시 30분(미국 동부시각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45분간 진행됐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윈디 파커 하원의장안보보좌관이 배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

국회, ‘LH사태 재발 방지법’ 등 177건 안건 의결, 15조 원 규모 추경안도 처리



박병석 국회의장이 3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는 3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165건 등 총 16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5일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을 의결하는 등 이틀에 걸쳐 총 17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4일 본회의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LH사태 재발 방지법,

스토킹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규정을 마련한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안 등 국민 안전 강화 법안, 개인회생절차 대상 채무자 범위를 확대한 ‘채무자 회생법’ 등 근로자 및 경제적 약자 보호 법안, 선거사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이 처리됐다.



3월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농어업인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힘이 되길”

이어 3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총 15조 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및 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결됐다. 추경안은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어제 본회의가 정회한 이후에도 늦은 시간까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한 끝에 오늘 추경안을 원만한 합의로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안 처리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추경안 합의를 계기로 여야가 앞으로도 타협하고 양보함으로써 협치를 이뤄가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추경안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긴급 고용대책’ 사업의 당초 정부안 2조 7천507억 원 가운데 시급성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약 2천800억 원을 감액했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대면분야 스타트업 지원’ 사업 물량을 조정해 600억 원, ‘고용창출장려금’ 등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에서 약 1천 379억 원을 각각 감액했다.

아울러 ‘국채이자 상환액’의 경우 정부가 추경안을 통해 증액한 1천822억 원 전액과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금액 중 추가로 1천804억 원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절감해 총 3천626억 원을 감액했다. 🍵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제2차 회의 모습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3월 10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과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했다.

제2차 전체회의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영희 전 사회분과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힘

에 따라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사회분과위원장으로 새로 위촉했다.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은 한국 사회학계의 원로 학자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제2차 전체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의제와 활동



박병석 국회의장이 3월 10일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으로 위촉된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계획을 보고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 “선거·정당제도 개편, 통치구조 개선, 대화와 타협의 국회 실현이라는 세 가지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대표하기 위해서는 선거·정당제도 개편이 필수적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소통과 타협으로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의제 설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은 “양극화 해소, 공정·포용경제, 혁신경제와 지속성장의 의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9대 과제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자산 양극화 해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혁신성장과 창업 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은 “갈등을 잘 관리하면 오히려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진영에 따른 사회 갈등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

고 밝혔다.

이어 정치분과 박명립 연세대 교수가 ‘국민통합·갈등완화·통합정치를 위한 헌정·제도·권한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박 의원은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분열·갈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불평등과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비례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헌정구조와 정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위한 개헌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개 분과위원회가 함께 유기적으로 논의해나감으로써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앞당기는 계기를 국회가 앞장서 마련하고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입법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됐다.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회의 개최



3월 29일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앞줄 가운데)과 이춘석 국회사무총장(뒷줄 가운데), 황상재 심의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심의위원들, 국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회의가 3월 29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황상재 한양대 빅데이터 센터 센터장을 포함한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올해 신설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방법 및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수상자 심의·선정을 전담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를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최근 법률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제1차회의 모습

안 발의와 처리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법률안이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폐지해 국민 생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상재 심의위원장은 “질적인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 우수한 입법과 정책연구를 실시한 의원님들과 연구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회의에서는 우수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과 우수한 실적을 보인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는 정책연구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방식과 평가기준을 의결했다.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법률안의 독창성과 성안 과정의 노력을 평가하는 ‘법률안 성안과정’,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협력적 입법’ 등 4가지 평가항목에 대한 정성평가를 통해 총 30건의 우수 법률안을 선정할 예정이며, 분야별 특수성과 각 위원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항목 및 10점 범위에서의 배점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책연구 부문의 경우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활동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평가해 연구활동·입법활동과 정책연구보고서의 정량·정성적 실적평가점수로 5개의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된 심의위원들이 5월 초까지 입법활동 부문과 정책연구 부문에 대한 평가를 마치면, 그 결과를 종합해 수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우수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실적이 우수한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는 5월 말 국회 개원을 기념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



3월 22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의 회의 모습

국회운영위원회는 3월 22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진 의원)를 열어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제시안과 10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된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의 이날 회의는 작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이루어진 두 차례 논의와 올해 2월 25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이후 네 번째로 열린 것이다.

김영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국회의원도 일반 공직자와 같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국회의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관련 위원회 위원 선임 제한, 위원회 안전심사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영진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장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의무, 이해충돌 검토기구의 설치 등 개정안과 관련된 주요 논의사항을 심사했다.

먼저 의원 본인과 그 가족의 법인·단체 임원 재직 현황, 재산 보유 현황 등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과 관련해, 의원 임기 개시 전에 사적 이해관계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되었고, 등록대상에 부동산 보유현황을 포함할지 여부, 등록 사항의 공개 여부, ‘가족’ 범위의 설정 문제 등을 심사했다.

또,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관련 위원회 위원 선임을 제한하는 안과 위원회 안전심사 또는 국정감·조사 과정에서 의원 본인과 그 가족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신고 및 회피신청

을 의무화하는 안을 논의했으며,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지 않거나 위원회 안전심사 등과 관련해 신고 및 회피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함께 심사했다.

한편, 이해충돌 검토기구의 설치와 관련해, 별도의 독립적인 검토기구를 신설하는 안과 현행 ‘국회법’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그 소속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하는 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심사내용에 대해 전상수 국회 입법차장은 이해충돌 검토기구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둘 필요가 있고, 이해관계 신고의 경우 정부제출인과 같이 민법상 가족개념으로 넓게 하더라도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대상에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는 것은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청구권을 부여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924)을 이유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심사경과를 고려해 추후 회의를 열고 이날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향후, ‘국회법’ 개정사항이 의결된다면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이해충돌 발생을 촘촘히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따릉이’(공공자전거) 타고 국회를 누비세요!

국회 공공자전거 대여소 설치 및 시승식 개최



이춘석 국회의사무총장(맨 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이 3월 16일 국회 ‘따릉이’를 시승하고 있다.

국회는 3월 16일 국회 본관 후면 공공자전거(따릉이) 대여소에서 ‘국회 공공자전거 대여소 설치 및 시승식’을 개최했다. 국회는 기존 1개소(총 20대)에 새로 설치한 7개소(총 62대)를 더해 총 8개의 따릉이 대여소(총 82대)를 운영하게 된다. 국회 공공자전거 대여소는 서울시의 주기적 소독 외에도 국회의사무처가 분무형 소독제를 별도 비치하는 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된다.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따릉이’는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이다. 따릉이 도입 이후 회원 가입자 수는 280만 명, 누적 이용건수는 6천만 건을 넘을 만큼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이춘석 국회의사무총장과 조용복 국



국회에 설치된 공공자전거(따릉이) 대여소 모습

회사무차장, 이용노 서울시설공단 교통사업본부장이 참석해 설치 상황을 점검했다. 평소 출퇴근길과 지역 구에서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함께했다.

시승을 마친 이춘석 국회의사무총장은 “봄이면 어린이와 시민분들이 잔디마당을 가득 채우던 국회의 모습이 그리워진다”며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고 다시 꽃피는 계절이 오면 시민들께서 대중교통과 따릉이로 더욱 편리하게 국회를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공간이든 자전거를 타고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편의를 돕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공공자전거 시설 확대는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틈새를 연결해 도보 통근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자동차 이용을 감소시켜 배기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의사당을 거점으로 따릉이 대여·반납 편의성이 높아져 따릉이를 활용한 국회 방문과 ‘윤중로~국회 경내~한강 둔치’를 잇는 국회 주변 자전거 길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따릉이 대여소 확대 외에도 청사 내 다양한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친환경 국회’ 조성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춘석 국회의사무총장은 “세계적인 ‘탄소 제로’ 추세에 맞춰 국회도 수소충전소 설치, 양산형 수소전기버스 도입, 전기차 충전소 확대 설치 등을 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도 친환경 정책에 참여해주셔서 우리나라를 미세먼지 없는 ‘탄소 제로’ 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

언제 어디서나 즐기는 ‘VR국회체험’, ‘온라인 국회 참관 서비스’ 시작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서 배너를 클릭하면 '온라인 국회 참관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국회는 3월 9일 코로나19로 국회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VR(Virtual Reality : 가상 현실) 온라인 국회 참관 서비스’를 시작했다.

‘온라인 국회 참관 서비스’는 경내참관 프로그램을 영상에 담은 국회경내투어 서비스와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 사랑재 내·외부를 둘러보는 360°VR체험으로 구성되어 일반 국민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국

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국회 참관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회, 국회사무처 및 국회방문자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국회 곳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국회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채널을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



[특집]

반복되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방안

최근 가정과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한 입법이나 처벌 강화가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아동학대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입법 대응 등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편집자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유형과 특성 분석

강지영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코로나19 시대의 아동학대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

학대아동 보호 위한 인프라 구축해야

공혜정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향

류경희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장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국회의 입법 대응

신항진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유형과 특성 분석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아동학대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에서 총 42명의 아동이 사망했다. 하지만,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했거나 인지한 사례에 국한돼 우리나라 전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 및 진행된 사건은 이 통계수치에서 제외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전체에 대한 통계치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거나 보고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문제 분석,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병원 등의 실무자들이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정의 및 기준을 공유하고,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두 유형, 직접적 가해와 극단적 방임

알려진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관련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이들 사망사건을 유형화했을 때 발견되는 두 가지 상위유형은 첫째, 아동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가해로 인한 사망과 둘째, 극단적인 방임에 의한 사망이다. 아동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가해는 다시 그 하위유형으로, 심각한 신체적 학대, 의도적인 살해, 신생아 및 영아 살해로 나눌 수 있다.

심각한 신체적 학대도 개별 사건에 따라 조금씩 특성이



강지영 교수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다를 수 있다. 먼저, 아동을 해하려는 의도에 대한 증거가 없이 충동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만, 치명적인 수준으로 폭력이 가해져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이다. 친부에 의해 영아에게 이러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가 많고 친모는 이를 방관하는 행태가 흔하며 사인으로는 외상(다발성 손상, 두부외상, 흔들린아이증 후군 등)이 가장 빈번하다. 반면, 심각한 신체적 학대 가운데, 긴 시간동안 지속적이며 잔인하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폭력이 발생해 아동의 신체적 손상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신체적 학대 도중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아동은 흔히 방임이나 정서학대까지 복합적으로 경험하기도 한다. 사인은 외상(다발성 손상, 두부 및 복부외상 및 영양실조)이 대부분이며, 계부모에 의해 영유아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사망 이후 사체훼손이나 유기 등의 은폐가 시도되기도 한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가해의 두 번째 세부 유형으로 의도적인 살해는, 흔히 '일가족 동반자살'이라고도 불리는 자녀 살해 후 자살사건이 많고, 양육자의 우울이나 망상 등에 의한 자녀 살해도 포함할 수 있다. 친부모에 의한 경우가 많고 아동의 연령도 앞선 두 유형에 비해 높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가해의 세 번째 세부 유형으로 신생아 살해 및 영아 살해는 출생 후 24시간 이내 혹은 1년 미만의 영아 살해 등으로, 친모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다. 심각한 신체학대에 비해 덜 폭력적인 경우가 많고, 가장 많은 사인은 질식사이지만 원인불명인 경우도 많다. 살해의도가 숨겨져 있거나 원치 않

는 아동, 임신사실을 숨겨왔던 경우 등이 관찰된다.

극단적 방임에 의한 사망은 고의적이며 지속적으로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아동에게 음식, 의료 처치 등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 혹은 아동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아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경우로 영양실조 혹은 의료적 방임으로 인한 자연사가 사인이 될 수도 있다. 보통 방임은 다른 학대유형과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극단적 방임만으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가해로 인한 사망보다 발생빈도가 낮다.

여러 가지 유형을 종합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의 연령이 0~1세 사이인 경우 피해 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은 개인과 가정 내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신건강(우울, 자해 및 자살 시도, 알콜 문제, 조현병 등), 어린 시절의 학대, 폭력, 빈곤 경험 및 현재 가정 내 이혼, 부부·동거인 갈등 별거, 경제적 어려움, 지지체계 부족 등이었다. 또한 가해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친모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친부의 가해가 빈번했으며 가해자는 26세 이하의 어린 나이인 경우가 빈번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문제의 실태 및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아동들의 삶이 더 이상 짓밟히지 않고 온전히 꽃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사회환경이 마련돼야 하겠다. 🍌

코로나19 시대의 아동학대

코로나19는 전 지구적으로 전에 없었던 새로운 도전을 초래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도 코로나 팬데믹이 빠르게 ‘광범위한 아동 권리 위기(broader child right crisis)’로 발전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거의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집 안에 격리된 어린이들에 대한 폭력, 학대, 방임이 증가일로에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교, 확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곤경에 처해 도움이 필요할 때 의존해온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로부터 단절되고 있다.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학대 같은 폭력의 고통과 희생을 유행병처럼 앓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빗대어 ‘유행병 속의 유행병’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범죄학의 잘못된 통념의 하나가 폭력은 집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것도 모르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가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범죄다. 더불어 폭력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좁지만 심리적, 감정적 거리가 멀어질 때 일어나기 쉬운 범죄여서 가정에서 가족 간에 발생할 위험성이 더 높다.

은 가족이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밀착해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써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가정이 오히려 외부로부터의 감시도 없는 심리적, 물리적, 성적 학대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엄격한 방



이윤호 명예교수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역지침으로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학대 가정으로부터의 탈출, 도움 요청, 생존·피해 극복 방법이 차단된다. 오히려 통제, 감시, 강제력이 학대하는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어 학대하는 사람에게 더 큰 자유를 주는 꼴이 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보호 아닌 갈등의 장소가 된 가정

가정은 아동 보호와 방어의 최일선이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스트레스가 그 방어를 위협하고 있다.

모두가 집 안에 갇금당하다시피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업은 물론이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모도 전에 없었던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마련이고, 이는 곧 아이와 가족과의 갈등을 부추기게 되어 가정이 아이들의 보호가 아닌 위험한 장소로 변하기 쉽다.

구체적으로 폭력, 학대, 방임에 대한 보편적 위협 요소뿐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된 직장고소득의 상실로 인한 빈곤과 식생활의 불안, 대면과 비대면 교육의 접근의 어려움이나 불능, 아동의 디지털 활동 증대에 비해 보호자의 감시 약화와 그로 인한 아동의 디지털 위험 노출 증대, 아동과 부모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 붕괴, 일상 활동과 생활의 붕괴, 아동과 부모의 약물과 알코올 사용증대 등의 요인들로 인한 가족 간 불화와 갈등의 빈발이 가정폭력, 특히 아동학대를 급증시킨다는 것이다.

범행의 예방은 기본적으로 동기와 기회의 억제를

통해서 가능하다. 집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위험한 부모에게 오랜 시간 노출되기 때문에 범죄 기회의 차단이 쉽지 않다. 따라서 어쩌면 범죄 기회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 잠재적 가해자의 가해동기를 해소하고 동시에 위험에 노출된 아동의 취약성을 강화해 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위험성이 높은 보호자들에게는 경제적 불안정 등 스트레스 요인을 해소해줌으로써 아동학대의 근원적 동기를 억제하고 아동에게는 보호와 보살핌의 제도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가정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이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이라고 한다. 가정폭력의 방지는 바로 이 가정경제의 안정과 독립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어쩌면 가정폭력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폭력범죄도 이제는 더 이상 형사 사법만이 책임지는 형사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과 복지의 문제에서 시작되고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불안과 음주 등이 가정폭력의 구체적인 원인이 된다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에 대한 가족요법과 같은 치료와 치유가 먼저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도 폭력이고 범죄이기에 형사 사법과 완전히 결별해서도 안 된다. 지금까지 가해자 중심의 사법, 그래서 그 이름도 형사 사법(criminal justice)인 범죄자 중심의 사법과 정의였다면 이제는 피해자 정의(victim justice)의 사법으로 전환해 잠재적 피해자요 생존자인 아동의 보호와 권리의 신장에 앞장서야 한다. 🍀

학대아동 보호 위한 인프라 구축해야

다섯 살 호영이는 계부의 학대로 인해 분리돼 동생과 함께 시설에서 보호됐다. 아동학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접근제한조치를 받았음에도 계부는 호영이가 생활하는 보육원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하지만 경찰은 미온적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계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1년의 보호명령 기간이 끝났을 때 지자체는 법률상 정해진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보육원 퇴소를 결정했고 사후관리를 맡은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계부와 친모가 심리치료와 부모교육에 응하지 않아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간 지 한달만에, 경찰관이 되고 싶었던 호영이는 계부의 끔찍한 학대로 사망하고 말았다.

세 번의 방임학대 신고를 당한 열 살, 여덟 살 형제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해당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법원에 ‘최장 1년간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할 것을 요청’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방임학대를 가볍게 여긴 법원은 피해아동을 학대친모와 분리하지 않았고 상담교육을 받는 보호처분 결정만을 내렸다. 두 형제는 또다시 친모에게 방임된 채 발생한 화재로 인해 첫째는 중상해를 입었고 둘째는 사망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는 입양모로부터 모진 학대를 당해 온몸의 골절상과 채장이 절단될 정도의 강한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사망했다. 입양 직후부터 가해진 학대의 증거를 발견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했으나



공혜정 대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아동학대의 징후가 뚜렷한 복부와 허벅지의 멍을 발견했음에도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입양부모의 변명에만 귀를 기울여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정인이는 2~3주에 한 번 온몸에서 멍이 발견되고 몸무게가 1kg이나 빠져 아프리카 기아아동처럼 온몸이 말라 소아전문의가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나, 입양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까지도 정인이의 몸이 말하는 아동학대의 신호를 외면했다. 결국 정인이는 처참한 모습으로 숨졌다.

호영이도, 화재로 사망한 인천의 둘째 아이도, 정인이도 모두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던 아이들이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미안하다.

정인이 사망 후 전문기관들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났다. 국민들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하고 입양모 살인죄 엄벌을 호소하는 수만 장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미안함을 표현했다. 정부도 국회도 정인이에게 미안하다며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했고 ‘정인이법’이 순식간에 만들어져 통과됐다.

즉각 분리 이후 아동보호가 더 큰 문제

정인이 사망 후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거나 재학대가 의심될 때는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제대로 학대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은 차치하고라도 즉각 분리한 이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인프라가 부족

한 현 상황에서 즉각 분리한 아동을 어디서 보호하겠는가. 또한 1년에 2차례라는 기계적 판단은 오히려 구조가 시급한 학대 피해 아동을 놓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인력과 시설 확충 등의 인프라가 담보되지 않은 즉각 분리는 즉각적인 원가정 복귀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위험한 부모로부터의 분리’라는 원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더 이상 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에게 미안해하지 않도록 아동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즉각 분리한 학대피해의심 아동에게는 영상촬영을 필수로 하는 건강검진과 발달 및 심리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말을 못하는 영유아나 언어발달이 늦는 아동, 피해 사실을 숨기는 아동의 학대 신호를 제대로 감지해 장·단기 보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분리됐다가 원가정으로 돌아간 후 재학대로 숨지는 아동의 소식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서는 불시에 가정방문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부모교육과 상담을 강제화해야 한다.

전문교육을 통해 육성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일, 학대위기 가정이 지속적이고 체계화된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게 회복되는 일, 장기보호 아동이 건강한 위탁가정에서 올바른 부모상을 배우고 성장하는 일, 그것은 더 이상 학대 피해 아동에게 미안해지지 않도록 아동학대 방지를 포기하지 않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될 때 가능할 것이다. 🍯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향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고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특히, 최근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슬픔과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연이어 보도되는 각양각색의 아동학대 사건은 우리를 무력감에 빠지게도 한다.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 온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핵심요소라고 생각하며, 편의상 아동학대 대응 단계별로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류경희 아동학대예방본부장
아동권리보장원

학대 조기발견, 초기대응, 사후관리가 관건

첫 번째로 조기발견이다.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그렇듯이 아동학대문제도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구조적, 사회 환경적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며, 매년 비슷한 추이로 약 80% 정도가 가정 내에서, 그리고 75% 이상이 부모에 의해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어 발견도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발

견·지원할 수 있는 여러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의무교육제도 등등.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안전한가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아이들을 자꾸 놓치는 것일까? 빨리 발견할수록 회복을 위한 노력과 비용은 최소화된다. 이제는 만들어 놓은 제도나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과 함께 내 아이는 물론 내 아이 친구들이 안전한가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초기대응, 즉 1차 신고 시 개입이 중요하다. 부모들은 대체로 훈육의 방법으로 체벌을 사용하고, 체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행위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감정에 따라 아이의 미숙을 탓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이에 반해 아동은 부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자기보호나 방어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학대여부, 심각성, 아이의 안전정도 등을 잘 파악해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성숙한 부모일수록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동에게 책임을 돌려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행위에 대해 은폐 또는 축소하려는 일반적인 가해자 특성과 함께 아동의 특성 및 심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는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제도의 조기안착과 진

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증원, 교육,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장치 등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사후관리,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한 재발방지다. 심각한 행위에는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언론에는 중대(사망)사건 중심으로 보도되지만, 신고접수 사례 중 83.9%가 원가정에서 보호된다(2019년). 이는 학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에는 아동학대 유형이나 발생원인, 가족특성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관리를 통해 가족통합 및 관계회복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도록, 특히 비자발적인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접근성과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더 많이 설치되고, 상담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제 아동학대 문제를 개인에게 책임 지우는 단계를 넘어 근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누군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아동학대 피해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내 생각과 태도를 아동의 권리 중심으로 바꿀겠다는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국회의 입법 대응

전국의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5년 1만 1천715건에서 2019년에는 3만 4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사망사건도 2015년 16건에서 2019년 4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전 국민의 사회적 공분을 자아낸 '16개월 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아동학대 대응책을 여러 차례 수립·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현장 대응체계의 문제점 개선에 주안점을 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입법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왔다. 이하에서는 제21대국회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마련한 대응 입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대응 노력이다. 우선,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 보호할 수 있는 '즉시 분리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가정 내 학대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보호조치 결정시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어 현재 5일로 제한되어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 사후관리를 거부·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0



신항진 전문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예측하는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해 양육환경 조사, 복지서비스 제공,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의 조치를 강화했으며, 보건복지부·교육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부처 간 학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정보공유도 강화했다.

둘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통한 입법대응이다. 동 법 개정은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과 아동학대 신고 시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중죄로 보고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조치이며, 즉시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는 '16개월 아동이 사망하기 전 경찰이 3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내사종결 또는 무혐의로 처분을 내린 데 따른 보완 조치다.

그 밖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을 의무화해 피해아동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했으며,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응급조치 시간을 기존 3일에서 최대 5일로 늘리고,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장조사 결과를 상호 통지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관련 업무수행 방해에 대한 벌금의 상한도 기존 1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셋째,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안동 규정은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을 '사랑의 매'로 미화시켜 이를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었으나, 이를 삭제해 아동의 인권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면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1대국회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다양한 입법조치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공적조사체계 구축, 출생통보제 마련, 아동학대중상해 피의자 신상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아동학대 대응 입법 방안을 논의 중이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입법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발생 사실은 은폐되기 쉬우며, 그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책도 부족한 게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대응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변화로 보인다. 아동은 미래의 주역으로서 보호의 대상이면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다. 더 이상 아동학대를 가정 내의 개인 문제로 국한시켜서는 안되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사회 구성원 공동의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 다할 것”



박 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파주시을

Q.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의 여당 간사 위원님으로서 각오와 포부가 궁금합니다.

A. 세계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적인 모범을 보였고, 현재 백신접종과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피해는 진행 중입니다. 특히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당장 급한 건 기반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 피해 지원

못지않게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도 중요한데, 문화·예술·체육·관광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K-콘텐츠가 한류를 계속 이어가고 관광산업이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편 현재 논란이 있는 대중예술, 체육계 학교폭력 문제, 업계 내 불공정 문제 등의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등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당 간사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이 우리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더불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Q. 최근 문체위는 공청회가 활발하게 열리는 등 일하는 위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21대국회 출범 이후 문체위의 주요 성과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A. 문체위는 모범적인 상임위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 기준으로 접수 법률안 321건 중 92건을 처리해 29%의 처리율로 겸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 중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위원회에서 추가로 35건의 법안을 처리해 실질적인 법안 처리율이 40%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는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와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 개최, 관련법의 빠른 통과 등으로 피해자 신속지원 등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해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체육인복지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스포츠클럽법’ 공청회를 3차례 진행하는 등 예술인과 체육인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현재 문체위의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제일 중요한 과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회복 지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여러 지원을 해오고 있고, 올해도 긴급피해 지원, 직접일자리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비대면 전환 등 사회적 변화에 관련업계가 잘 적응하고, 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복지와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등 문화생태계 회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스포츠분야의 혁신, 공정성 제고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할 과제입니다. 또 국민들이 문화와 여가를 더 많이 즐길 수 있도록 국내관광의 활성화, 생활체육 참여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박물관·체육시설 등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문화도시 지원, 관광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과 동시에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문화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투자확대 등 업계 경쟁력 강화, 우리 콘텐츠 보호와 창작 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저작권 유통환경 마련 등 저작권 강국 기반 마련도 중요합니다.

또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지역관광 선도모델 발굴, 스포츠 신시장 창출 지원도 필요합니다. 특히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 확산, 해외진출 지원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문화교류 강화, 한국어 확산 등 신한류의 지속적 확산 지원 등을 통해 문화적 리더십을 갖춘 문화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 구축도 주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문체부, 문화재청의 예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 예산 대비 1.2%정도 수준인데, 2% 이상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야당 간사 위원하신 이달곤 의원님께 칭찬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달곤 간사님은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하셨고, 학계에도 몸담으셨기에 학문과 실무를 겸비하신 능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 회의장에서 본 이달곤 간사님은 학식과 인품을 갖춘 그리고 차분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진 선비셨습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쟁보다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회복,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 문화산업 지원 등을 주문하시는 등 국민을 위한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절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

글 고영선 사진 임진환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의 국가 정책 우선순위 높일 것”



이달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Q.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의 야당 간사 위원님으로서 각오와 포부가 궁금합니다.

A. 문화예술은 삶의 흔적이고 뿌리입니다. 관광과 스포츠가 더해지면 인류의 궤적을 파악할 수 있고 육체와 정신도 강화하는데, 경제문제와 사회적 갈등으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문화와 예술 관련 기반정책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방향 설정에 대한 깊은 토론과 연구도 부족

합니다. 문화와 관광 분야가 경제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또 체육 분야는 성적 지상주의에 매달려서 폭력과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지체된 문화예술 분야에 생기를 불어넣고 민족문화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경제와 국민 생활에 문화, 예술, 관광, 그리고 체육 분야의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정치적 색깔의 개입을 차단하고 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이 자율의 광장에서 마음껏 끼를 발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Q. 최근 문체위는 공청회가 활발하게 열리는 등 일하는 위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21대국회 출범 이후 문체위의 주요 성과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A. 문체위는 정쟁을 삼가고 수준 높은 정책토론을 지향해 오고 있습니다. 제21대국회 기준 법안 접수 321건 중 92건을 처리해 겸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최고의 법안 처리 성과(29%)를 냈습니다.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 1.3%로 낮은 수준입니다. 국민 관심층의 기여와 기업의 자발적 부담도 추가되지만, 이 규모의 예산으로 국민경제와 국민생활 향상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나 종사자 수 그리고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를 고려할 때, 예산의 투입이 늘어나야 합니다.

코로나19의 대응체계도 부족한 점이 많으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과의 소통문제, 경직적이고 일률적인 지원방식 등을 지적하면서 집행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예산 운용의 편향성을 개선하고 실효성과 연속성을 높이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혔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했습니다. 또 은퇴 선수의 사회적 안전망과 지원을 위한 ‘체육인복지법’의 체계도 강화할 생각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의 개정과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었고, 저희 당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여당 의원님들의 심정적 이해도 많이 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Q. 현재 문체위의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국민경제에서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국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차지하는 위상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스포츠, 로또, 경륜, 카지노 등에서 국민이 받는 편익과 지출의 균형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사행산업의 확장과 중독문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문화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제적 상황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매우 열악합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모으겠습니다.

또, 부처의 사업집행방식에 전근대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관료주의를 깨부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이 나타나도록 성과주의로 살피겠습니다. 문화예술인과 체육인, 그리고 관광업계와 소통해 의견을 예산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간의 사업수행방식과 예산매칭방식(matching mode)의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문체위 여당 간사 위원하신 박 정 의원님께 칭찬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문체위의 여당 간사이신 박 정 의원님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대학 강단에서 인재를 키웠고 사업가로 변신, 어학원을 설립해 성공 신화를 만들어오신 분입니다.

박 간사님은 노선을 분명히 설정하고 계시지만 순리로 의견을 조정하고 있는 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협력적인 국정관리로 연결시켜 문화 창달에 앞장서고 계시는 분입니다. 깊은 성찰과 소통의 기술을 활용해 성과를 만들어내는 분입니다. 때로는 “무위를 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爲無爲 則無不治)”, 또 “할 일은 하지 않음이 없다(無爲 無不爲)”를 연상케 합니다. 한 귀인(貴人)을 만나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글 고영선 사진 임진완



신승겸 장군 유적지에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품은 도시, 대구 동구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대구광역시 동구을

서울에서 KTX를 타고 남쪽으로 향한 지 1시간 50분, 동대구역을 빠져나오니 마스크 너머로 봄 냄새가 풍긴다. 아직 코끝이 시린 추위를 느꼈던 서울과 달리 따뜻한 햇살에 온몸이 녹는다. 완연한 봄이 느껴졌다.
대구의 진산(鎭山) 팔공산, 1천500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동화사,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1호인 동동축백나무숲, 신승겸 장군 유적지 등 대구를 대표하는 명소를 지역구로 둔 강대식 의원은 “대구의 봄을 만끽하시라”며 취재진을 반갑게 맞았다.

강대식 의원은 가장 먼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1호인 도동측백나무숲으로 취재진을 안내했다. 500년 이상 된 초록빛의 측백나무 700여 그루가 향산 절벽 바위 틈새에서 긴 세월을 지키고 있었다.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과 함께 절벽에서 자생하는 측백나무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해졌다.

“도동측백나무숲은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후 훼손방지와 국가유산 보존을 위해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개울 건너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운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 의원은 “이 곳은 조선 초기의 대학자 서거정 선생이 말한 대구십경(大邱十景) 중 제 6경에 해당하는 북벽향림”이라고 소개했다.

“옛날에는 절벽 앞 개울물이 깊고 숲도 울창해 시인들과 풍류객이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영천, 경주로 가는 길목이어서 길손들의 쉼터가 되기도 했지요. 저도 지역에 들 때마다 지나치는 곳인데 사시사철 푸른 모습을 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신승겸의 충절로 목숨을 건진 왕건



봉무공원은 1992년 봉무수변공원으로 조성되어 대구시민들의 아늑한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도심 속 자연공원이다. 단산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봉무공원의 둘레길은 대구를 대표하는 산책로로 유명하다. 산책로를 따라 곳곳에는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강 의원은 “이곳은 남다른 애정이 있는 곳”이라 소개했다.

“동구청장 시절 지역을 위한 고민을 하다 팔공산 자락에 각종 둘레길을 조성했고 저비용으로 직접 둘레길 안내 책자를 제작해 예산절감에 기여했습니다. 또 공원 내 자연생태학습 시설인 나비누리관을 건립하고 만보산책로, 전망대 등을 설치해 관광명소로 지역 활성화를 이끌었죠.”

봉무공원에서 파계사 쪽으로 가다 보니 1981년 대구광역시기념물 제1호로 지정된 신승겸

도동측백나무숲





봉무공원 산책로

장군 유적지가 보인다.

“신승겸 장군은 927년 후백제군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해 고려 태조 왕건의 목숨이 위기에 처하자 왕건을 대신해 전사한 충신입니다. 왕건은 그의 죽음을 애통하게 여겨 시신을 거두어 광해주(지금의 춘천)에 묻어주었고, 전사한 자리인 이곳에는 지묘사, 미리사를 세워 명복을 빌게 했습니다.”

신승겸 장군 유적지를 중심으로 ‘파군재’, ‘지묘동’이라는 표지판이 곳곳에 보였다. 강 의원은 “이 지역은 고려군과 후백제군이 벌인 팔공산 전투의 핵심 지역으로 관련된 지명들이 많다”고 했다.

“신승겸 장군 유적지가 위치한 이곳 ‘지묘동(智妙洞)’은 신승겸이 왕건 대신 죽기로 각오하고 왕건의 복장을 한 데서 나온 것으로, ‘그의 지혜가 기묘했다’는 데서 유래됐고, 표충사 앞쪽 동화사와 파계사로 갈라지는 삼거리의 ‘왕건의 정예군이 크게 패하였던 고개’라 하여 ‘파군재’라 부르고 있지요.”

불교문화의 성지 ‘팔공산’



대구시 중심에서 북동 방향으로 약 20km 지점에서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난다. 두 물이 합쳐지는 곳이 화강암으로 웅장하게 솟은 팔공산이다. 팔공산에는 동화사, 파계사, 부인사, 은해사 등 명찰이 많다. 그중 동화사는 팔공산에 있는 여러 사찰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신라 때 창건된 사찰로 당시 이름은 유가사(瑜伽寺)였는데, 겨울에도 오동나무꽃이 많이 피었다 해서 동화사(桐華寺)로 이름을 바꿨다.

동화사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대웅전 너머로 팔공산의 정기가 느껴졌다.

“동화사는 높이 33m인 세계 최대의 석불인 통일약사여래대불을 비롯해 대웅전, 마애여래좌상, 비로암삼층석탑 등 수많은 보물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10대 관광명소로 지정되어 수백만 명의 내외국인들이 참배하러 오는 동양의 대표 불교 성지입니다.”

강 의원은 지극정성으로 빌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갯바위도 소개했다.

“영험의 상징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참배객들이 줄을 잇습니다. 정식 명칭은 관봉석조여래좌상이지만 갯 모양의 돌을 쓴 부처라고 해서 갯바위로 더 유명하죠. 머리에 갯 쓴 모양이 대학 학사모와 비슷해 입시철이면 합격을 기원하는 가족들이 많이 다녀갑니다.”

지역 의정 경험 살려 생활정치 펼칠 것



곳곳마다 지역주민들이 마스크를 쓴 강 의원을 알아보고는 “반갑다”고 인사했다. 강대식 의원은 동구에서 태어나 동구에서 60여 년을 살며 구의원(8년), 구청장(4년)을 역임했다.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 그의 강점이기도 했다.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도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했다, 표지판이 낡아 손봐야겠다”면서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챙겼다.

강 의원은 총선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동구비전 3533 공약’을 내걸었다. ‘대구 동구비전 3533’은 동구청장 재직 때부터 강구해온 실천형 정책이다. 그는 “‘3533공약’은 교통·도시개발·지역경제 3개의 분야를 5개의 권역별로 나눠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강대식 의원은 2021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3천5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 의정을 이끌면서 주민들과 눈높이를 맞춘 ‘생활정치’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무리한 업무 추진은 독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됐지요. 저는 임기가 끝나고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임기 중 과욕이 부른 손실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알기에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했지요. 귀중한 유산이 가득한 지역구를 물려받았듯이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열심히 펼 것입니다.”

대구 | 글 윤성혜 사진 김지범

동화사 너머로 팔공산이 보인다





류호정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평등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용인시정

4월호 ‘칭찬합시다’ 주인공은 이탄희 의원이다. 그를 추천했던 류호정 의원은 “임성근 판사 탄핵안 발의를 위해 함께 활동하면서 이 의원님의 뿌리 깊은 초심과 확고한 신념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존경 할 수 밖에 없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탄희 의원은 “쑥스럽다”면서 “추운 겨울에 장소도 못 구해서 국회 본관 앞 분수대 옆에서 떨면서 함께 기자회견을 했던 기억이 난다. 법관 탄핵은 류호정 의원님을 비롯해 정당의 구분을 넘어 힘을 보태주시는 분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고 답했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을 추진하다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2021년 2월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탄핵을 주도한 사람은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최초 폭로한 인물이기도 하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판사를 하며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 의원은 엘리트 판사 코스로 가는 법원행정처 부임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업무’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판사라는 직업이 좋아 천직으로 생각했지만, 금지와 사명에 어긋나는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이 의원은 11년간 몸담았던 법원에 사표를 내고 공익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그 시기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길거리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집회, 시위, 기자회견 현장도 다니고 글도 쓰고 입법 제안을 위한 토론회도 하면서 값진 경험을 했죠. 지금 생각해도 그 시절이 가장 행복

했던 것 같아요. 법원 밖을 나오고 나니 안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법원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이후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법개혁의 결자해지를 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제안을 받고 4개월 넘게 고사하다 막판에 정치참여를 결심했다. 당선 후에도 “사법농단 판사들을 탄핵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임 방기”라며 판사 탄핵의 정당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가난의 범죄화’를 막아야

이탄희 의원은 지난해 ‘가난의 범죄화’를 막기 위한 ‘장발장 방지 3법(형사소송법·형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판사 생활을 하면서 참치캔을 훔쳤다고 구속된 아이들을 보며 양형 기준에 대해 의문을 가진 것이 시작이었다. ‘장발장 방지 3법’은 주거가 일정치 않다는 이유로 구속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인의 소득 및 재산과 연계해 벌금을 정하도록 했다. 또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보호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흔히 ‘월세구속, 전세석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월세 사는 사람은 낮은 보증금을 포기하고 도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고 ‘전세 사는 사람은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석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법 개정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도 함께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이 의원에게 의정활동 목표를 물었다.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ide)’로 심해진 교육격차 해소와 아이들에게 건강한 자아를 키워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교육개혁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세자영업자들과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근로빈곤층을 줄여나가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



“장혜영 의원을 칭찬합니다”

“장혜영 의원(정의당, 비례대표)과는 공익인권법재단에서 개최한 캠프에 강사로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고 공적인 의무감, 사회적 페르소나에 묻혀 개인을 잃어버리는 의원을 종종 목격하는데 자기 자신을 잃으면 좋은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장혜영 의원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며 제21대국회의 가장 용기 있는 국회의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글 윤성혜 사진 유윤기

우공이산 (愚公移山)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광명시장 재선 후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양기대 의원의 좌우명은 우공이산(愚公移山)이다.

“우공이산은 중국의 철학서 ‘열자’ 탕문편에 나오는 고사로, 우직한 사람이 결국 산을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남이 보기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988년 동아일보 입사 후 15년간 기자로 활동한 양 의원은 이후 제17대 총선과 제18대 총선에서 광명시을에 출마해 낙선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에 당선돼 8년간 광명시장을 역임했다.

“저는 오랜 시간 끊임없는 도전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나온 삶 자체가 ‘우공이산’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생각이기 때문에 ‘우공이산’은 제게 딱 맞는 좌우명입니다.”

양 의원은 사회부와 경제부, 정치부에서 활동하며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이달의 기자상을 7번이나 받았고 1995년과 1997년에는 한국기자상을 받으면서 ‘특종 기자’로 이름을 날렸다.

“당시만 해도 사회 부조리와 권력부패가 만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경찰과 법원, 검찰 등을 출입하면서 폭력계의 대부를 비호하는 정관계 세력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지기도 했고, 대통령 아들의 비리를 추적해 폭로하기도 하는 등 우리 사회의 부패와 모순을 질타하고 부정부패 척결에 기여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기자가 적성에 맞았지만 양 의원은 좀 더 직접적

으로 사회개혁에 앞장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자로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통일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도 늘 품고 있었고요. 그러다 2004년 초 열린우리당이 창당되면서 영입제안을 받고 정치입문을 결심했습니다.”

광명동굴과 KTX광명역세권 개발 이끌어

광명시장이 된 양기대 의원은 1년 365일 중 360일을 출근하며 광명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했다.

“광명시는 시민의 70%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입니다. 저는 KTX역사만 덩그러니 있던 KTX광명역세권 개발에 나서 코스트코 코리아 본사를 광명으로 이전시키고, 이케아 국내 1호 점을 유치했습니다. 또 40년 동안 버려져 있던 폐광을 인수해 광명동굴을 조성했습니다. 2015년 4월 유료화한 후 9개월 동안 92만 명이 광명동굴을 찾았고 2016년부터는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유료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덕분에 일자리도 크게 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원이 된 후 그는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책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더불어 민주당 남북고속철도추진특별위원장을 맡아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남북고속철도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제 꿈은 KTX 광명역에서 도라산역을 거쳐 개성-평양-신의주까지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이를 중국 단둥-베이징-하얼빈-블라디보스톡까지 연결해 동북아 1일 생활권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최근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남북고속철도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통일부가 이번 달 안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남북고속철도의 노선, 수요 예측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5년 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후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근 광명·시흥신도시의 투기 의혹과 관련, 양기대 의원은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돈을 벌려고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막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자족기능 갖춘 살기 좋은 도시로 잘 개발해 국민들에게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은 ‘우공이산’의 정신으로 묵묵히 도전하며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것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기자생활도 원 없이 했고, 두 번의 낙선과 시장으로서 일한 8년의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렵게 국회에 들어온 만큼 의원의 역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워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국가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남북경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고속철도를 연결해 남북중리의 동북아경제권을 만들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젓 먹던 힘까지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글 김현아 사진 임진환

“건강한 대한민국 만드는 ‘사회 약사’ 될 것”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약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사회 약사’가 되는 게 의정활동의 목표”라고 말한다. 그는 이화여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줄곧 약사로 활동하다 대한약사회 정책단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 감사 등을 지내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당내 유일한 보건외교계 출신 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서정숙 의원을 만났다.

서정숙 의원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가르침과 오랫동안 약국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 든든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대구의 유복한 가정에서 3남매의 막내, 외동딸로 태어난 그에게 어머니는 ‘살아 있는 교육자’ 같은 분이었다고 한다. 서 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가르침, 각자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어머니”라고 회상했다.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한 뒤 그는 폭넓은 사회를 경험하

고자 대형 제약회사에 입사했다. 서 의원은 “젊을 때 큰 조직에 들어가 어떤 프로세스로 약이 제조되고 상품화되는지 알고 싶었다. 조직의 시스템과 동료들과의 인간관계도 겪어보고 싶었다”고 했다. 서 의원은 그곳에서 여약사회 친목회장을 지냈다. 그는 “그리고 보면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늘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등에서 25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수많은 환자를 만나고 상담하면서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질병에 녹아있는 습관이나 환경 등 사회적인 문제도 읽을 수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약사’에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회 약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육아를 하면서도 제가 살던 2천여 세대의 아파트 어머니회 회장으로 선출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소통과 나눔을 경험했다. 이러한 활동은 보수 정당 중진 국회의원의 지역구 여성조직 책임자로 스카우트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당조직의 운영시스템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생활정치를 체득하고 정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지역 득표율 79.6%라는 큰 지지를 얻으며 서울특별시의원(서울 강남구제3선거구)에 당선됐다. 그는 “서울시의원으로 의욕적으로 일했지만 지방의회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 등의 의정활동에서 일정한 한계와 제약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은 입법부인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어렵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했다. 그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다.

국민에게 일상 속 행복 전하는 ‘소확행 정치’ 하고 싶어

국회 입성 후 서정숙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방역 중심 컨트롤타워로서의 정부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켜봤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제1호 법안’으로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 산하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여야 합의를 거치면서 ‘질병관리처’에 머물렀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질병관리 컨트롤타워의 권한 강화에 여야가 모두 공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약학이라는 전문 분야를 살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 의원은 지난해 10월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비상상태 속에서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았다. 서 의원은 백신 조달 계획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구 지원 등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전문의약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고 구멍 난 의약품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는 거대 담론도, 선언적 공약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 한 명 한 명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생활정치가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른바 ‘소확행 정치’지요. 이를 위해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려 합니다. 우리 사회 깊숙하게 퍼져 있는 불공정한 병폐를 치유하고 국민들에게 ‘마음의 처방’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글 박민선 사진 김진원

아크부대, 열사의 땅에서 찾은 국군의 가치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지난 2월 17일부터 6박 9일간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6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중동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에 방문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 2개국이다.

순방 동안 모하메드 UAE 왕세제와의 접견, UAE 동포와의 간담회, 하마드 바레인 국왕과의 접견, 바레인 왕세제와의 면담 등 다양한 일정이 이어졌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우호증진 외교를 뛰어넘어 건설 프로젝트 등 경제 협력, 군사와 방위산업, K-방역을 중심으로 한 보건 분야의 협력 등의 영역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순방이었다.

그중 가장 보람찼던 일정은 설날을 맞아 아크부대를 방문해 이역만리 타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직접 만난 것이다. UAE에는 약 150여 명의 장

병으로 구성된 아크부대가 파병되어 있다. 2010년 UAE 왕세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특전사 시험훈련 참관을 계기로 국군 특전사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같은 해 특전부대의 파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후, UAE 특수전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지원할 목적으로 파병이 시작됐다.

대한민국과 UAE 협력의 상징 '아크부대'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의미다. 이름에서부터 볼 수 있듯 아크부대는 대한민국과 UAE 협력의 상징으로, 형제처럼 지낼 정도로 가까운 양국의 우호 관계를 보여준다. 먼 땅에서도 든든하게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크부대 장병들을 직접 격려할 수 있어 정말 기뻐다. 올해는 아크부대 파병 10주년이 된 해라 그 의미가 더 깊었다.

아크부대를 보니, 어느새 우리 군이 세계 곳곳에 평화와 희망을 불어넣는 군대로 자리매김했다는 느낌이 들어 가슴이 뛰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강대국의 파병 지원을 받고, 군사 원조와 경제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도움을 주는' 국가로 우뚝 섰다는 자부심이 절로 들었다. 또한, 기존 우



아크부대를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병주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

리 군의 파병부대는 평화 유지 활동의 성격이 강했는데 아크부대의 주둔 목적은 양국의 군사협력과 국익 증진을 위한 파병이라는 것이 주목할 만했다.

국군의 파병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며, 세계평화 기여·국가위상 제고·국가이익 증진 등에 도움이 된다. 또한, 다양한 국가와 함께 연합작전을 진행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군사적 역할뿐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기존 대한민국의 안보 관점은 한반도 내 북한군의 위협에 고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 부각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창궐, 종잡을 수 없는 사이버 위협,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기존의 안보 문법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충분히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다.

이제는 안보의 층위가 넓어져야 한다. 실제 파병부대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에 대한 보

호 임무와 우발 시 현장에서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역할을 한다. 얼마 전 호르무즈해협에서 우리 국적 선박이 이란 혁명 수비대에 억류됐을 때, 근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청해부대가 급파되어 선원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을 안심시켜주었던 사례도 있다.

해외파병은 우리에게 안보 부담이 아닌 안보 자산

해외파병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안보 부담이 아니라 안보 자산이다.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국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점, 세계 어느 곳에서든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군의 파병과 주둔은 그 가치가 크다. 아크부대뿐 아니라 레바논의 동명부대, 남수단의 한빛부대 그리고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까지 1천300여 명의 국군 장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임무를 수행 중이다.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힘찬 격려를 보낸다. 🍷

스포츠 폭력,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스포츠 폭력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안민석·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민정·최강욱 의원(열린민주당)은 3월 4일 ‘스포츠 폭력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최근 잇따른 체육계의 스포츠 폭력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스포츠 인권침해 발생 원인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진단,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이행 등이 논의됐다. 또 시도체육회 등 스포츠 단체에 대한 스포츠 인권 전담 감독관 배치, 스포츠계 공익제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확대 등의 대책도 제시됐다.

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는 스포츠 인권침해 발생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를 설명하면서 정부와

체육계의 스포츠 폭력 미투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이행 등 스포츠 폭력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이민표 학교체육진흥회 사무처장은 ‘합숙 훈련 금지’를 방안으로 내세우며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스포츠 시스템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박정희 대구시 북구 의원도 각 지자체에 인권감시관을 배치하고, 학생 선수들의 폭력 경험 실태조사 시행과 함께 체육 전공 졸업생들을 체육 전문 인권침해 및 성폭력 예방 강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은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7차례에 걸쳐 발표한 내용이다.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확립, 학교스포츠 정상화, 스포츠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스포

츠기본법 제정, 스포츠클럽 활성화, 엘리트스포츠 시스템 개선,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정신이 담긴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이행해, 메달만 따면 된다는 메달·성적 지상주의적 비교육·반인권적 훈련 문화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체육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포츠 개혁과 혁신에 앞장서야 스포츠 선진국, 스포츠 복지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1등 주식 골라담기: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가능할까’

이광재·맹성규·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월 4일 ‘커피 한 잔 값으로 1등 주식 골라담기: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가능할까’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식 소수점 매매는 주식 거래 최소 단위를 1주에서 소수점으로 낮춰 0.1주 단위 등으로 매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몇몇 증권사가 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해외주식에 한해서다. 국내의 경우 주식의 발행과 유통을 규제하는 상법·자본시장법령 체계는 1주를 최소단위로 하는 거래로 설계돼 있어, 소수점 매매가 불가능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소수점 주식 거래의 필요성과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이 논의됐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은 커져가고, 투자 소외 계층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건강한 투자를 장려하려면 자산 배분이 필수인데, 현재 우량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해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도입하면 1만 원 이하로도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 소액투자자도 자산 배분 투자를 통해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다”며 “소액투자자들에게 자산배분 수혜를 확대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수익증권 발행실태 활용을 제안했다. 이 실장은 “소수점 주식 투자자는 증권회사와 계약을 통해 배당청구권, 잔여재산청구권 등을 확보하고, 의결권 대리 행사도 가능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고객 편의 제공 및 최선 집행의무 준수 등을 위해 매매체결 인프라 개발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에 방점을 뒀다. 정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에 방점을 뒀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투자를 위해 관련 검토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은 “우량 대기업 이익이 주식매매를 통해 국민소득으로 이어지려면 부담 없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야 한다”면서 “액면분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핀테크·IT 분야의 선도주자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상법 등 현행 법령체계 내 가능한 소수단위 거래 구현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으나, 신속한 서비스 출시가 불가능할 경우 투자자 보호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 도입 의지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정책토론회

박완주·정춘숙·이규민·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월 9일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범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현행 ‘소년법’ 제4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사법재판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국선변호사 당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우범소년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처우, 객관적 통계 부재 등을 주요 근거로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를 ‘우려’를 이유로 처벌받은 우범소년 규정은 죄를 범한 아동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조장·강화한다는 점에서 더욱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과장은 “인권위는 소년법상의 우범소년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해왔다”며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이 국제인권 규범에 적합하도록 조속히 정비되어 이 규정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부당하게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져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문제가 해소될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현규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은 “소년사법 절차에서 차별이나 과잉처분 없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범소년 폐지 필요성 논의에 공감했다. 또 “우범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평기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과장은 “현행 법체계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복지적 행정 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우범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선도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인력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행 복지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우범소년 규정이 기능하고 있는 최소한의 선도·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위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복지라는 이유로 소년법에서의 우범소년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소년사법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봐주고 어른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팽주만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연구관은 “최근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효과적인 선도 및 교육 방안으로 학교장의 통고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의원은 “우범소년 제도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목적의 ‘소년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 제시된 고견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배제가 아닌 포용의 정책을 구성해 위기 아동·청소년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해법이 모색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여성이족위원장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법과 정책개선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3월 11일 ‘연구성과평가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창의·도전적 연구개발 체계로 전환을 위해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평가제도, 연구 성과의 다양한 형태와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의 설계, 중장기적 연구 성과 관리·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05년에 연구성과평가법(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질적 성과 중심 평가, 성과관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현재의 법·제도가 연구 현장의 변화, 연구 성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방식이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형 연구’로 전환됨에 따라 연구 성과의 형태와 가치도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자율과 책임, 다양과 개방의 연구개발체계를 위한 ‘연구성과평가법’ 개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연구개발 초기에 사업·과제에 대한 기획 강화, 연구자의 자율적인 연구목표 설정 및 연구 수행, 연구 성과 및 평가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책임성 제고, 연구과정, 평가결과, 성과 등 정보의 체계적인 축적과 공개 확대 등을 지적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

(R&D) 성과평가와 성과관리·활용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이정표와 같은 중요성이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해 향후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더 나은 연구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연구자들이 국가연구개발에서 단순히 평가를 위한 성과 대신 진정한 의미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학의 위기,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대학의 상향 평준화가 필요하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월 15일 ‘대학의 위기,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대학의 상향 평준화가 필요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수십 년간 대학의 위기, 지방대의 위기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학체제가 공유성장에 부합하지 않은 이유로 대학의 서열구조와 각종 평가 및 재정지원 방식의 경쟁 체제를 지목했다. 그 중에서도 대학의 위기 속 공유

성장을 위해서는 대학 서열화 해소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입시’를 꼽았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국립대 중심 대학개혁안의 파산과 그 대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대학 서열화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재정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포용적 상향 평준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요 사립대를 포함해 대학에 파격적인 투자를 지원하되 학생 선발권을 맞교환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 평론가는 교수 1인당 1억 원 비율로 대학에 국고 추가 지원, 5조 원 규모의 20만 명의 공동입학시스템 추진 등도 함께 제안했다.

송근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대학 재정 여건, 교육 여건, 지역 소재에 따른 대학 경쟁력, 학령 인구 감소 등 교육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이 맞물려 있어 해결방안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발제에서 나온 방향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학서열화와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도 “대학 서열화의 방향점이나 인식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과장은 공유대학 모델을 지향점으로 보고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연계·공유·협력 등의 부분에 대해 재정지원 사업뿐 아니라 제도적 설계도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평가지표에서도 이와 관련한 지표를 발굴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부분을 고민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위기에 주저앉을 것이냐,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냐는 우리가 얼마나 대학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며 “세계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서 대학이 산업·지역·일자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과학기술인의 일·생활균형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국회간담회**

김상희 국회의장은 3월 16일 여성과학기술인 활용을 위한 ‘과학기술인의 일·생활균형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국회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및 과학기술인 일·가정 양립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 마련, 일터 차원의 제도와 정책 시행, 사회 차원의 양성평등 인식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이은경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참여 촉진 및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채널과 공공기관 특성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생태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정책 전환을 위한 기획, 연구, 의제 발굴에 범부처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부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과학데이터스쿨 센터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센터장은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과학기술인 대체인력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성과학기술인담당관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제 실시를 확대하고 주요위원회 위원이나 면접위원에 여성 보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상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최근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일·생활균형 연구문화 확산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내외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오늘 나온 제언들이 유의미한 정책들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발제 내용과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해 상반기 내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관한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며 “올 상반기 안에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녀돌봄 보육지원 등 과학기술인의 일·생활균형 보장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정리 윤성혜



국회, ‘내사태 재발 방지법’ 등 의결

국회는 3월 24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165건 등 총 16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스톡킹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규정을 마련한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안, 개인회생절차 대상 채무자 범위를 확대한 ‘채무자회생법’, 선거사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최근 스톡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법률안은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 등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및 법원의 잠정조치 등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했다. 또 전담수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스톡킹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다.

이번 제정으로 스톡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톡킹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전조치 및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스톡킹 피해자를 한층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사위)

현행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 기준은 담보채권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권은 5억 원 이하이나, 이 기준은 현행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 15년 이상이 지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해야 한

다는 등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을 담보채권의 경우 현행 10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무담보채권의 경우 현행 5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채무액이 개인회생 한도액을 초과해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채권자들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절차를 밟지 못한 채무자와,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액이 낮은 탓에 아예 도산절차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상당수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인회생절차는 일반회생의 채권신고, 관계인 집회 결의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변제 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라는 점 등에서, 보다 많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해 좀 더 쉽게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되고 2021년 1월부터 파리협정이 적용된다. 파리협정은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 예상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섭씨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더 나아가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후변화대응

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기관 지정,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제정으로 R&D 및 전문인력의 양성, 전담기관의 지정 등을 통해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과방위)

방사선비상 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갑상샘 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해 방호약품의 사전배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법률안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내외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해 방호약품을 비축·관리하도록 하고,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호약품을 사전배포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대상자에게 설명·안내를 의무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호약품의 비축·관리, 사전배포 및 설명·안내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배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방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배상금액의 총 합계가 9조 4천852억 엔(2020.12.18.기준 엔화 환율 1,062.58원 감안시 약 100조 7천8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나 현행법의 배상책임 한도액 3억 계산단위(SDR)로는 향후 대규모의 원자력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를 충분히 배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사고 한 건 기준의 배상책임한도를 현행 약 5천억 원 정도인 3억 SDR에서 약 1조 5천억 원 수준인 9억 SDR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으로 원자력사고로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등록대장 기재범위에 형제·자매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고, 정부내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 정책 협의체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명칭 중에 ‘대책’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건·사고에 쓰여 부정적 어감을 갖고 있어 변경이 필요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시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과 연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등록대장에

형제, 자매를 포함해 작성하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명칭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변경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시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협조 또는 협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등록대장의 활용도가 제고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시 관계 부처간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2021년 9월 13일 끝나는데, 현재 추세로 진정을 처리해도 지금까지 종결되지 않은 1천248건의 진정 중 948건은 제대로 조사도 못한 상태로 위원회 활동이 종료될 수 있어 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3년 9월 13일 까지로 2년 연장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위원의 임기도 2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돼 군사망사고에 대한 원활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

법률안은 군에서 순직·전사한 군인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제

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군무원 경력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군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규정했으며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해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규정도 정비했다. 이번 개정으로 군에서 순직·전사한 군인의 가족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

법률안은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육아휴직을 할 경우 전역시기의 연장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배우자의 동반휴직 허용, 장성급 장교의 별도정원 운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복무연장자의 연장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고,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장성급 장교에 대한 별도정원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배우자와 동반하는 휴직사유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군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결의 사유 및 감면조치 요건 등을 국가공무원법과 균형을 맞춰 개정 또는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군인들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동반휴직 확대 시행을 통해 군인들의 권익이 보다 증대되고, 장성급 장교의 탄력적인 정원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국방위)

법률안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률안은 6·25전쟁을 전후해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또 공로자 및 그 유족으로서 공로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위원회에 공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공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공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보를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했다. 또 공로자 및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공로자 및 그 유족이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았거나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취지로 이미 금전적·비금전적인 보상이 이뤄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제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헌신한 행위에 대한 자긍심

이 고취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을 의무화했다. 또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부동산 및 정보 관련 취급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안위)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국세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영세사업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제도가 없어 사업 재개나 취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그 거주자에게 직권으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개인지방소득세의 분납을 허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세사업자의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안위)

하나의 시·도에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반면, 하나의 시·도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조직체계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정안은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2개의 시·도경찰청이 설치된 시·도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각 시·도경찰청의

여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행안위)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할 때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동 법에 따른 건설공사가 아닌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 계약이행을 위한 공사대금 지급 보증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와 수급인 간 계약이행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현행법에서는 소방기술자에 대해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해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건설·전기·정보통신 등 타

공사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자 양성 및 인적교육에 대한 법적근거 및 제도는 없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할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소방기술자 육성 및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도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로 소방시설 공사사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되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을 통해 소방기술력 및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안위)

법률안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거사무의 중립성·공정성 등과 관련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선거전용통신망에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되는 바코드에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명 및 일련번호 외의 정보 기재를 금지했다. 또 관외사전투표 발송시 우체국까지 사전투표관리관 및 참관인이 동행하고,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 보관시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해당 영상정보는 6개월간 보관). 이번 개정으로 사전투표관련 제도를 엄격화해 선거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사무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경기, 리그의 조기종료 등으로 프로스포츠단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어, 지자체의 체육시설을 연고경기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프로스포츠단의 임대료 감면 필요성이 논의됐다.

개정안은 프로스포츠단이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기개최가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구단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프로스포츠단의 경영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체위)

법률안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등급결정이 곤란하다는 점과 지역주민 보호 및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혜택과 규제 문제, 관광특구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가 시·도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관광특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더라도 지정취소 등의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가 지역 여론 등을 고려해 이를 실행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과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의 연기 및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에 따라 이용료 징수,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관리지역에 해당 지역의 범위, 조치사항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도

록 규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특별관리지역의 지정현황 관리·정보 공개 및 특별관리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특별관리지역 지정제도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했다. 이와 함께 관광특구 평가 결과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시·도지사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방역체계로 시설이용자가 급감함에 따라 관련 시설의 서비스 상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평가와 등급결정이 어려워진 업계의 부담을 감경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제도와 관광특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은 회원조합장 중 일부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어 다수의 회원조합장은 대표자 선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농협의 조합이 수행하던 공제사업이 보험업으로 전환되면서 적용된 방카슈랑스 배제 특례가 2022년 3월 종료됨에 따라 특례기간 만료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개정안은 조합원 5천 명 이상인 조합의 경우 2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의결권 제도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등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선출 간선제 방식에서 총회 직

선제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2022년 3월 1일 종료되는 현행 규정에서 5년을 추가해 2027년 3월 1일까지 방카슈랑스 규제가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이 강화되고, 조합의 경영 안정성이 유지돼 기존의 사업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은 세계 에너지 신시장의 성장,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선진국과의 에너지 분야 기술격차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 플랫폼을 확보하고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어 제정됐다.

법안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수법인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학을 지원·육성하고 그 업무를 조정·감독하도록 했다. 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평의회 등 조직에 관한 사항과 학생정원, 입학자격, 학위과정 등 학사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이번 제정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가

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미래 에너지 분야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위)

최근 디지털·멀티미디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투명 디스플레이, 레이저 가상 키보드, 3D 홀로그램 등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자인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화상의 형태를 현행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법률안은 개정됐다.

개정안은 화상의 정의를 규정하고, 물품을 전제하지 않는 화상을 현행법의 체계에 맞게 물품으로 의 제해 디자인으로서 보호하도록 했다. 또 화상의 실시행위를 새롭게 규정하되, 화상의 특성을 고려해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화상을 제공하는 행위 및 저장매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 등을 실시행위에 포함시켰다.

화상디자인의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신기술 디자인의 해외시장 개척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벌의 물품을 구성하는 부분 중 주요 부분을 모방하고 그 외 형태는 달리하는 모방디자인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회)

지난해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하류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피해구제는 지연돼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

개정안은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환경분쟁의 조정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사유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와 사회 구성원간의 화합이 도모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환노위)

2018년 이물질이 섞인 폐플라스틱을 불법으로 필리핀에 수출한 사례가 적발된 것을 계기로 환경부는 보세구역 등에서 수출입하려는 폐기물 컨테이너의 개장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검사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환경부가 이를 부담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수출입 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세구역 등에 출입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입폐기물 통관 전 검사비용을 폐기물의 수출입으로 수익을 얻게 되는 사업자가 부

담해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될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환노위)

법에 따른 등록·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화학물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하위 사용·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사용·판매금지,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현행법상 조치명령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등록·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화학물질을 하위사용·판매하는 자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및 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등록·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화학물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환노위)

법률안은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2019.12) 등 대학 실험실 사고의 증가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이 필요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대학생·대학원생 등의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실험이나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재해 발생 시 민간보험으로 보상받았던 대학생·대학원생 등 학생 신분의 연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아, 각종 급여 이외에 연금 등의 보상을 받는 등 산업재해보부터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노위)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직장내 괴롭힘 행위 금지 규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노위)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해 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을 퇴직 근로자로 한정해 재직 근로자의 임

금이 체불된 경우 구제수단이 미비하고,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의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돼 근로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으로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등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추가 징수액을 5배 이하의 금액으로 상향했다.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발표하는 등 대규모 택지 조성 중 민변·참여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 명이 광명시흥에 100억 원대 투기성 토지 매입을 한 사실을 지적했고, 이후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정보의 누설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부정 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

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미공개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고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위)

개정안은 공사의 임직원 및 10년 내 퇴직자 등은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고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적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공공참여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촉진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공공이 주도하도록 해 투명성을 달성하고, 통합심의·수권소위 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

도록 했다. 또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기부채납 규제 강화 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여건이 열악한 구역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위)

친환경차에 대한 신규허가를 제한해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에 따르도록 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대여·알선을 금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자격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며, 수소연료 가격에 대한 보조를 통해 수소 화물차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 신규허가 시 공급기준 적용 배제를 폐지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또 일정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 등에 행정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수소전기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해 이를 고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노후 경우 화물차의 친환경차로의

대폐차를 촉진하는 한편 수소연료 가격보조를 통해 수소차 보급을 확산해 환경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화물차의 안전성과 제도 정비에 따른 합리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신매매등 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여성가족위원회)

법률안은 UN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의 이행 법률이 없고, 인신매매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도가 부처별로 산재해 관련 범죄에 대한 총괄대응체계가 없다는 지적으로 제정됐다.

법률안은 ‘인신매매등’ 개념을 정의하고, 개별법상 인신매매등 관련 범죄를 통합해 ‘인신매매등범죄’임을 명시했다. 또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지표 개발·권고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규정 및 수사·재판 절차상 특례도 마련했다. 이번 제정으로 식별 지표를 이용해 피해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강화되며, 인신매매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여가위)

생리용품은 모성 보호 차원에서 전체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되고 있다는 문제와 청소년쉼터에서 강제 퇴소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여성청소년이 신청하는 경우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의무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되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이 확대되고,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가위)

법률안은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 제고, 공직사회의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해 언론 등에 공표해야할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을 명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 기반도 마련했다. 🏠

정리 고영선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인신매매등 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

우리는 보통 인신매매 하면 영화 ‘테이큰’과 같은 납치 상황이나 과거 뉴스를 장식했던 길거리 봉고차 납치를 떠올린다. 새로운 법을 제정할 만큼 사건이 많은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한다. 하지만 인신매매 문제는 과거의 것도 줄어든 것도 아닌 현재의 문제다. 글로벌 상황에서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미 ‘형법’에서도 인신매매 관련 조항은 넓게 규정되고 있는데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와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형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이 처벌규정들은 2013년부터 시행되었지만 피해자 보호와 인신매매 범죄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방지법 제정은 제 18대국회와 제19대국회 내내 좌절됐다. 그래서 이번 인신매매방지법의 제정은 비록 많이 늦었지만 의미가 크다.



차인순 수석전문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주요 내용

이 법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몇 가지만 간추려 본다면, 첫째로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피해자의 동의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이것은 가해자의 처벌과 연관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자책상황에 놓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피해를 명확히 할 때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두 번째는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과 적용이다. 현행 처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확정하여 지원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기존에 개발된 식별지표를 개선해 검사, 경찰, 출입국관리 공무원 등 법집행 공무원들이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이에 기초한 피해자 확인과 지원을 신속히 해나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 번째는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관한 특례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수사·재판 특례조항들은 처벌법이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묶은 통합법에서 규정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현재 인신매매에 대한 기본 처벌규정이 '형법'에 있는 상황에서 수사·재판 특례조항은 방지법에 들어가게 됐다.

네 번째는 인신매매 범죄 피해의 다수가 여성과 아동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지원의 전문역량을 구축해온 여성가족부가 이 법을 소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인신매매방지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사회부총리 소속으로 인신매매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중앙과 지역에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을 두어 피해자 보호·지원을 원활하게 하도록 했다.

살아있는 법을 위한 협력과 남은 과제

실제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아니 훨씬 그 이전부터 인신매매방지의정서¹⁾ 비준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노고를 기억하지 않고는 이 법의 제정을 얘기할 수 없다. 실제 입법과정에서도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시민사회로부터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많은 의견과 자문이 오고갔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여러 부처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청회에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와 형사정책 연구자인 진술인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고, 이 외에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의견서가 제출됐으며 '인신매매특별법 제정을위한연대회의'의 의견도 전달받았다. 이 의견들 중 주요내용은 소위원회 심사 자료에 모두 기재되어 논의되고 일부 반영됐다. 짧은 심사기간의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시민사회의 질 높은 의견과 지적인 입법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법의 시행 준비와 시행 과정에서 관련 시민단체의 오랜 경험을 경청하고 탄탄한 협력을 기반으로 그 결실이 피해자에 대한 강한 보호로 귀결되기를 기대해본다.

덧붙여 이 법 제정 내내 쟁점이었던 인신매매 처벌 공백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약속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고려해 인신매매 관련 범죄에 관한 수사 및 재판 실무와 사례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의 관심 부족, 범죄 입증 미흡, 낮은 선고형 등 실태를 파악한 후 처벌 규정의 별도 도입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

1)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2000년 10월 채택된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협약'의 보충 의정서들 중 하나로,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동 의정서에 서명했으나 2013년 '형법' 개정 이후 2015년에 가서야 비준했다.

일본의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디지털청 신설 논의

일본이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디지털청 신설의 첫발을 내디뎠다. 2020년 9월 들어선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9월 30일 디지털 개혁 관련 법안 준비실을 발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올해 2월 9일 마침내 디지털사회의 이념을 정한 '디지털사회형성법안'을 비롯한 '디지털청설치법안' 및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은규
국회 일본 주재관

일본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디지털사회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정책을 추진해왔다. 2000년 'IT(정보기술)정책의 기본이념과 중점계획을 정의한 IT기본법' 제정 이래 세계 최첨단의 IT국가를 노린 일본은 IT전략인 'e-Japan 전략' 수립 및 행정부 전체의 IT정책을 총괄하는 내각정보통신정책감(정부CIO) 설치, 디지털사회의 수단으로서의 마이넘버제도¹⁾ 창설, 그리고 2019년 국가나 지방의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를 위한 디지털 절차법 성립 등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IT정책을 추진해왔다.

20여 년 전부터 정보통신정책 추진해왔으나 성과 미미

일본의 역대정권이 IT전략을 중요 과제로 추진해왔지만 그 성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로 일본은 2011년 3·11동일본대지진 시 재해정보의 전파에 IT보다 텔레비전 보도나 팩스, 무선 방재시스템이 사용됐다. 특히 2019년 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바이러스 감염 발생자 취합 시 지자체간 행정시스템이 일원화되지 않아 확진자 수 집계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마이넘버카드를 보유한 국민들에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 주민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불편신청자보다 오히려 지급이 늦어지는 등 디지털 후진국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유엔이 2020년 공표한 세계 전자정부 순위에서도 일

1) 마이넘버제도는 주민표를 갖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마이넘버(개인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

일본의 디지털 정책의 주요 흐름

2000년	•IT(정보기술)정책의 기본이념과 중점계획을 정의한 IT기본법 성립
2001년	•모리 요시로(森喜朗) 정권, 5년 이내에 세계최선단의 IT국가를 노린 일본 최초의 IT전략 'e-Japan전략' 책정, IT인프라정비를 명기
2003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정권, 의료 등에서의 이용 및 활용에 중점을 둔 'e-Japan전략2' 책정
2013년	•행정부 전체의 IT정책을 총괄하는 내각정보통신정책감(정부CIO)을 설치
2015년	•마이넘버제도 창설
2016년	•마이넘버카드 교부 개시 및 관민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 성립
2019년	•국가나 지방의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를 위한 디지털 절차법 성립
2020년	•10만엔의 급부금지금 등 코로나19 대응시 디지털화의 후진성에 대한 비판 분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수상이 디지털청 창설을 표명 •신설 디지털개혁담당상에 히라이 타쿠야(平井卓也) 취임, 디지털청의 설치준비실 발족 •정부, 디지털 개혁의 기본방침 결정(12월)
2021년	•디지털청 설치법안등 관련법안 국회제출(2월) •디지털청을 500명 규격으로 발족(9월)
2023년 3월 말	•거의 모든 국민 마이넘버카드 취득
2025년 3월 말	•마이넘버카드와 운전면허증 일체화
2026년 3월 말	•전국 지자체의 업무시스템 통일·표준화 완료

※참조 : 도쿄신문(2021. 1.25)

본은 14위에 머무르고 있으며(덴마크 1위, 대한민국 2위), 2016년부터 교부하기 시작한 디지털사회의 신분증 명서라 할 수 있는 마이넘버카드의 보급률 또한 2020년 5월 기준으로 전 국민의 16.7%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재난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불편과 혼란이 표출되면서 디지털 분야에 대한 개혁여론이 확산되자 스가 내각은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이루

는 디지털사회 실현을 대표적 정권과제로 공표하고 행정의 디지털변혁(DX: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하는 담당대신으로 IT정책에 정통한 히라이 타쿠야(平井卓也) 중의원 의원을 임명했다. 또 일본 사회의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이끌어갈 디지털청 신설을 위한 법령 제·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스가 정부의 간판 정책으로 상당한 속도감을 가지고 시작된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개혁정책은 불과 3개월 만에 디지털청 설치와 IT기본법 개정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이어졌으며 관련 법안 제·개정을 통해 올해 9월 1일 디지털청을 출범할 계획이다.

스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관련 법안을 보면, 행정의 디지털화 추진의 사령탑으로서 시스템정비와 종합 조정을 담당할 '디지털청 설치법안', 여유와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국민생활의 실현, 국민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 개인 및 법인의 권리의익의 보호 등의 기본이념 등 디지털사회의 이념을 정한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안',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정, 마이넘버를 활용한 정보연계의 확대 등에 의한 행정절차의 효율화, 행정절차에서의 전면적인 도장(押印) 폐지 및 서면의 교부 등을 요하는 절차의 개정(48개 법률의 개정) 등 '디지털사회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제·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 중 가장 핵심은 '디지털청의 창설'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보급이 확대되지 않은 마이넘버카드 문제²⁾, 부처

2) 히라이 타쿠야 디지털개혁담당상은 "마이넘버카드는 디지털사회의 원격 신분증 명서"라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국민들이 발급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화 지연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이나 절차 등에 대한 문제점, 시스템 연계 미비로 인한 행정비효율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었다.

디지털청은 디지털변혁(DX) 선도하는 강력한 추진주체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창설되는 디지털청은 사회 전체의 디지털변혁(DX)을 선도하는 강력한 추진주체이자 디지털사회 형성의 사령탑으로서, 내각과 각 부·성의 시책을 통일하기 위한 종합 조정기능을 갖는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정보시스템 예산은 디지털청으로 일괄 계상하는 등 일원적 관리를 하게 된다. 또 지자체별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가 달라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스템 표준화와 연계한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과 종합 조정을 수행한다. 특히 디지털사회 구축에 필요한 마이넘버카드 보급의 가속화 등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스가 내각은 이러한 행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데이터의 축적·공유·분석에 근거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 사회경제활동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함으로써 일본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향후 경제성장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스가 내각의 강력한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아베 내각 때부터 디지털정부를 위해 추진해온 핵심정책인 마이넘버카드의 도입은 상당한 예산과 혜택지원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인해 여전히 증가속도가 느리다. 일본 사회의 현금결제·서류·도장 등 전통문

화의 고수 경향, 초고령화의 심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의 전환 등도 일본 디지털사회 실현에 성공하기 위해 필히 넘어야 할 산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청 신설로 인해 예산이나 인사의 권한이관이 이루어질 경우 각 부처로부터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본의 디지털사회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



※참조 : 도쿄신문(2021. 1. 25)

TV로도 즐기고
 폰으로도 즐기고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국회방송 NATV



**국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채널**

IPTV
olleh tv
 65

IPTV
SK Broadband B tv
 65

IPTV
U tv
 172

skylife
 165

케이블 방송
 지역에 따라 채널 번호가 다르므로
 해당 지역 방송국에 문의

텔레비전이 없어도! 본방사수를 못해도!!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국회방송'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생방송 시청과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 국회방송 앱



● 소셜미디어 채널



‘정책’을 ‘법’으로 만드는 입법의 장인(匠人) 일본 중의원 및 참의원 법제국의 조직과 역할



조승래 법제연구분석과장
법제실

중의원 및 참의원 법제국 설립의 배경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의회에서는 1948년부터 의회 소속으로 중의원 및 참의원에 각각 독립적인 법제지원조직을 두고 있다. 일본 국회법은 “의원(議員)의 법제에 관한 입안에 이바지하기 위해 각 의원(議院)에 법제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31조제1항),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의원법제국법(議院法制局法)을 두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과 같이 내각과 여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의회 소속으로 독립된 법제지원조직을 두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¹⁾

일본 의회가 중의원과 참의원에 법제국을 각각 두고 있는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을 통치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주도로 내각이 입법권을 독점할 수 없도록 의회를 ‘국가권력(國權)의 최고 기관이자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규정한 평화헌법 제41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의회의 입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합군 최고사령부 점령기에 미국 연방의회의 법제지원조직을 참고하여 중의원 및 참의원 소속으로 법제국을 두게 된 것이다.²⁾

아울러 당시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평화헌법(constitutionality) 및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령(directive)에 어긋나는 내용의 입법을 막기 위해 법률안 입안 후 법제국장이 그 내용에 관한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승인(clearance)을 얻도록 했다.³⁾

1) 영국의 경우 의회 입법과정에서 법제지원을 하는 의회법제국(The Office of the Parliamentary Counsel)이 내각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2)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지 않고 의원에게만 법률안 발의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찍이 1918년에 하원부터 독립된 법제지원조직(The Office of Legislative Counsel)이 운영되기 시작해 그 다음 해인 1919년에는 상원에도 설치되었다.
3) 衆議院法制局『衆議院法制局七十年の歩み』(2018) 20-22頁

일본 의회 법제국의 조직 구성

현재 중의원 법제국은 법제기획조정부와 법제업무 담당하는 5개의 부(部) 및 중요한 법률문제 등 법제국장의 특명사항을 담당하는 법제주간(法制主幹) 등 86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의원 법제국은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5개의 부(部)와 법제주간(法制主幹)·총무과·조사과 등 75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의원 법제국과 참의원 법제국 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모두 공개채용 형식으로 임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만 30세 이하이면 전공에 제한 없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시험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1차 시험은 기초능력(일반교양 등)과 법률과목에 대한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헌법·행정법·민법에 대한 논문형 및 면접시험으로, 3차 시험은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률문제에 관한 구술시험으로 구성된다. 중의원·참의원 법제국 모두 변호사 자격 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기제 직원 모집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의원·참의원 법제국 모두 좋은 인재를 모으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의회 법제업무는 통상적인 송무업무와는 달리 대부분의 응시자에게 생소한 영역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의원·참의원 법제국은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해 인터넷상으로도 배포하여 의회 법제업무를 알리고, 정기적으로 대학 졸업 예

정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열어 중의원 및 참의원 법제국의 업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중의원 및 참의원 법제국의 채용 경쟁률은 200~300 대 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 의회 법제국의 일하는 방식

일본 의회 법제국 관계자와 면담할 때마다 나오는 질문이 있다. “한국 법제실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법률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회 법제실의 입안 회답 건수는 1년에 7천 건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설명에 이어지는 질문이다. 중의원 법제국에서 수정안을 포함해 연간 100여 건 정도 처리하는 것에 비하여 양적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이다 (표 1 참조).

〈표 1〉 중의원 법제국과 국회 법제실의 입안 회답 건수

연도	중의원 법제국(정원 86명)	국회 법제실(정원 86명)
2016	161건	4,088건
2017	108건	5,983건
2018	101건	7,433건

주: 중의원 법제국 실적에는 수정안 포함
 자료: 국회 법제실 내부자료 및 衆議院法制局 『衆議院法制局七十年の歩み(資料編)』(2018) 11頁을 토대로 재구성

우리 국회 법제실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타나는 기본적인 이유는 일본 의회에서는 의원발의 법률안 발의에 소속 정당의 승인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어

서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수요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의원의 경우에는 교섭단체(會派)의 승인이 없으면 사무국에서 법률안을 접수하지 않는 관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의 사법부는 이러한 관례를 의회자율권에 속한다고 하여 적법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⁴⁾

입안 건수의 차이로 업무의 강도 또는 난이도를 판단할 수도 없다. 중의원 및 참의원 법제국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우리 국회 법제실보다 넓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 법제실이 법률안 입안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비해, 일본의 중의원 및 참의원 법제국은 법률안의 발의는 물론 정당 내부의 검토 및 국회 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 등 입법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일본 중의원 및 참의원 법제국의 경우 의원과 직접 여러 번 대면해가면서 법안내용을 조정하는 경우도 많으며, 정당 내부의 심사 및 의회 심의를 대비한 답변자료까지 지원한다(그림 1 참조).

한편, 중의원 법제국의 경우 '법제에 관한 예비적 조사'의 권한이 있어서 자료제출요구권도 인정되고 있다(의원법제국법 제10조). 또한, 별도의 법규상 명문의 근거는 없지만 중의원 및 참의원의 사무국에서 법제국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법률안은 관례적으로 접수하지 않을 정도로 법제국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⁵⁾

〈그림 1〉 중의원 및 참의원 법제국의 입안 업무 절차

입안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 내용의 확인 · 의원의 구상에 대한 조언·제안 · 정책 구상의 구체화
법제도화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및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 정책목적과 수단과의 합리적 관련성 구상에 대한 조언·제안
조문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안 요강(要綱) 작성 · 법안 및 조문대비표 작성
정당 내 절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자료 작성 · 법안 설명 보좌 · 질문에 대응
법률안 제출	
국회 심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 질의 작성 · 답변안 작성 · 위원회 답변 보좌

자료: 衆議院法制局「衆議院法制局令和3年総合職採用案内」4-5頁
参議院法制局「参議院法制局総合職採用案内2021-2022」3頁

의원발의 법률안의 장점을 이끌어내는 법제국의 역할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내각 제출 법률안이 아닌 의원발의 법률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일본 의회에서는 중의원 및 참의원 법제국의 지원으로 <표 2>와 같이 의원발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성립에 이른 사례가 적지 않다. 비록 성립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일본에서도 의원발의 법률안은 소수 정당 입장에서 자신의 정책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며,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4) 最判平成11年9月17日(LEX/DB 文獻番号 28052291)
5) 茅野千江子「議員立法の実際」39頁(第一法規,2017)

〈표 2〉 일본 의회의 법률안 제출 및 성립 건수(1947-2018년)

	내각 제출	중의원 발의	참의원 발의
제출 건수(A)	9,986	3,995	1,433
성립 건수(B)	8,865	1,445	237
성립률(B/A)	88.8%	36.2%	16.5%

주: 대상기간은 1947.5.20.~ 2018.12.30.

자료: 衆議院法制局『衆議院法制局七十年の歩み(資料編)』(2018) 12頁을 토대로 재구성

의원발의 법률안으로 성립된 주요 법률로는 ①고령사회대책기본법(高齢社会対策基本法, 1995년), 제조업 기반기술 진흥 기본법(ものづくり基盤技術振興基本法, 1999년) 등과 같이 국가의 근본이 되는 정책을 정하는 기본법, ②장기이식법(臓器の移植に関する法律, 1997년), 재생의료 종합추진법(再生医療を国民が迅速かつ安全に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2013년) 등 의원이 정책논의를 이끌면서 만든 법률, ③고령자 학대 방지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법(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2005년), 스토키방지법(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2008년),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 2016년)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문제 및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중의원 및 참의원 법제국은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의원발의 법률안의 장점과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의원의 입법배경과 의도를 잘 나타내기 위하여 제정 법률에 전문(前文, preamble)을 붙이는 방안도 활용하고 있으며, 일명 ‘행정부에 대한 속제 조항’이라고 하여 쟁점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후 행정부가 국회에 검토 및 보고를 하도록 의무 조항을 두고 있고, 나아가 행정입법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입법레도 배제하지 않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입법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서로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지속되길 기대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와 고도경제성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등 풀어야 할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이웃나라다. 우리나라의 암관리법(2003년)이 일본의 암대책기본법(がん対策基本法, 2006년) 제정에 참고가 되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성범죄 대책입법을 일본에서 진지하게 참고하고 있을 정도로 양국의 법제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 법제실은 일본 중의원 및 참의원 법제국과 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의원 법제국과는 2019년에 공동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정기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 마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1.1.1.]

지난 20년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약 6조 원에서 약 27조 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매년 1천억 원 이상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부처 수도 10개에서 15개로 증가했으나 부처별 복잡한 관리규정으로 연구자들이 업무 시간의 많은 부분을 행정 업무에 할애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하 ‘R&D혁신법’)이 2018년 12월 발의, 2020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로부터 ‘R&D혁신법’의 시행 의미와 과제를 알아봤다.

‘R&D혁신법’, 다른 관련 법률에 우선 적용돼

‘R&D혁신법’은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 책임성 확보, 혁신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던 R&D 관리규정을 체계화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연구 현장에선 낯고 복잡한 R&D 관리 규정이 행정 부담의 원인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국가 R&D 사업의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각종 규정이 286개에 달해 연구자는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다른 규정에 따라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 2016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자가 업무 시간의 62.7%를 행정 업무에 할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R&D혁신법’의 제정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이호준 사무관은 “우선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주고 지원해주신 의원실 보좌진과 국회 입법조사관들께 감사드린다. 많은 내용이 담긴 제정법안 만큼 검토 작업이 쉽지 않았는데, 이분들의 끈기 덕분에 ‘R&D혁신법’이 빛을 볼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R&D혁신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양식과 절차가 통합·간소화돼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부처는 연구

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공모일정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예고해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사전에 준비해 응모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또 참여연구원 변경과 같은 경미한 연구협약의 변경은 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소 등)이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등)에 통보만으로 협약이 변경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매년 이뤄지던 협약이 전체 기간에 대해 체결되며, 연차평가와 정산이 연구단체별, 연구 종료 시에만 이뤄지도록 간소화했다. 이외 항목별로 상세(물량×단가)하게 제출하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도 비목별 총액만 제출하도록 했다.

둘째, 여러 개로 분산·운영 중인 연구비 관리, 연구자 정보, 과제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연구관리시스템(PMS)을 구축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의 혁신 기반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연구 윤리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도 범부처 기준으로 통일, 적용하고 부처로부터 제재처분을 통지받은 대상자는 제3의 기관(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호준 사무관은 “R&D혁신법의 시행으로 업무 절차와 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해석이 명확해졌으며 현장의 행정 부담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 초기에 달라지는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고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FAQ를 담은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난 1~2월 진행한 유튜브 설명회 자료를 3만 명 이상이 시청하는 등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 법령을 ‘R&D혁신법’에 맞게 개정해야

‘R&D혁신법’의 보완점에 대해 이호준 사무관은 법의 적용 범위를 지적했다. 현재 특정 유형의 사업은 제3조에 따라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법을 적용받는 사업과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어 법 적용에 공백이 발



이원욱 소위원장(왼쪽)이 지난해 5월 국회 과학기술혁신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회하고 있다.

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가급적 ‘R&D혁신법’에 해당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적용 예외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과 행정규칙을 ‘R&D혁신법’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R&D혁신법’과 기존 법령이 상충하는 경우 ‘R&D혁신법’이 우선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볼 때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혁신법’이 연구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연구자에 대한 제도 설명과 함께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연구 현장에서 불필요한 행정 규제가 제거되도록 연구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혁신법’의 제정으로 20년 만에 연구개발 법체계의 혁신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자가 마음껏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 고영선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을 마련합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2021-02-19 기획재정부위원회 의결
2021-02-26 본회의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국회, NH 투기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주제로 공청회

문체위, '스포츠클럽법안',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공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3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스포츠클럽 진흥법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등 스포츠클럽법안 3건을 비롯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선진적 스포츠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대희 부경대 해양스포츠학과 조교수는 “독일만 해도 9만여 개의 스포츠클럽이 있고 우리 돈으로 2만~2만5천 원만 내면 지역 내 스포츠클럽에서 스포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규 전국스포츠클럽협의회 회장은 “지자체 관련 기관 담당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체육시설 사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인찬 더브릿지컨설팅 대표는 “향후 스포츠클럽이 더 활성화되려면 '풀뿌리 조직'인 동호인을 포함할 수 있는 클럽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선 이한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예술인복지법’이 있는데 왜 이 법이 필요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인복지법’은 그

야말로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법이고, 법안은 (예술인의) 기본권리 보장을 선언하고 권리구제를 규정하는 것으로 취지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예술인으로부터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률안은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승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위원회가 두 개(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및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보호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위, LH 투기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

3월 9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관직을 걸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타산지석으로 삼고,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 장관은 부동산 관련 기관 직원은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토지거래 신고제와 재산등록 의무제를 도입해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국토교통부와 LH의 행태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서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야당 위원들은 변 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심상정 위원(정의당)은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겠냐. 그러니 국민이 ‘당장 사퇴하라’는 것”이라고 했고 이종배 위원(국민의힘)도 “사퇴 의사를 표명했느냐”고 재차 물었다. 변 장관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거취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변 장관은 송석준 위원(국민의힘)이 감회가 어떠냐고 질의하자 “참담하다. LH에 1년 7개월간 있으면서 끊임없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얘기했지만 저의 감독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 허무하다”며 “국토부에 와서는 이런 기관들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이종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3월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김상훈 위원(국민의힘)은 조사 결과에 대해 “사태를 조기 진화하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수박 겉핥기도 이런 겉핥기가 없다. 조사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위원(국민의힘)도 “전산망으로 다 연결돼 있어 의지만 있으면 짧은 시간 내에 확실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정부가 막대한 조사단을 구성해서 9일간 고작 7명을 추가 발견한 게 믿어지나”라고 말했다.

여당 위원들도 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데는 의견을 함께했다. 진성준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되는 토지개발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을 조사하면 금방 (공직자인지 여부가) 드러날 텐데 왜 이 방법을 두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명단을 뽑고 동의서를 받아서 조사에 들어가냐. 신속한 결과를 요구하는 국민의 응답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조사 방법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변창흠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김은혜 위원(국민의힘)은 변 장관을 향해 “사의표명을 대통령에게 하신 바 있나”라고 물었고 변 장관이 “아직은 없다”고 하자 “그러면 사의표명을 하실 생각은 있으시냐”고 재차 물었다. 반면 홍기원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물러나는 것만이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개편, 제도개선 부분을 책임 있게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환노위, 가사근로자 및 필수노동자 보호 입법을 위한 공청회 실시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3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 및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차례로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의 논의대상 법률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발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등 총 3건이다.

진술인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근로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근로 시간과 휴게시간의 모호성, 단체행동 및 비용 상승 가능성, 다른 법률과의 충돌여부 등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제정으로 현재 노동시장에서 형성돼 있는 이용요금보다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여러 세제 지원이나 사회보험료 감면 혜택 등도 부처 간 협의할 때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근로와 휴게를 나누기 어려운 가사근로자의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측정하거나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생계수단으로 가사노동을 주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규모는 20~40만 명에 달한다”라고 강조했다. 표대중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는 “가사서비스의 근로 형태가 가정 내에서 이뤄지고 호출형 근로형태로 이뤄지다 보니, 근로기준법의 법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의 논의대상 법률안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필수노동자 보호법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등 총 5건이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필수노동자라는 용어를 정의하기 어려운 만큼 ‘재난기 필수업무종사자’와 같은 상황을 한정하고 종사자의 범위를 개방하는 입법 방향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도 “범위·지원 내용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재난 상황의 다양성에 적시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입법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필수업무 지정과 지원 내용을 정하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에 노동 대표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자칫 필수업무 지정이나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 객관적인 원칙이나 기준이 아니라 교섭 내지 흥정의 방식으로 전개될 우려도 있다”며 “종사자 그룹들의 주장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법 제정 취지가 재난 발생시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인 만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제정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제정법을 만들 게 아니라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무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관한 공청회' 실시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3월 17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의 논의대상 법률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정부 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등 총 5건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벌어진 배경에 실질적인 규제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공감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패 방지 및 공직윤리의 제고를 위한 법령이 있음에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LH의 경우에도 내부정보의 활용 등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명확성이 떨어지고 실질적 규제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사후라도 위법한 행위를 통해 취한 이득은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이전에 논란이 됐던 법안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많이 보완됐다.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다면 21세기에 21대국회가 가장 의미있는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법 적용 대상과 관련, “정부안은 청탁금지법과 달리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하고 있는데 그 적용 범위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고위공직자 범위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 임원들의 경우 상당한 영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기관장이나 상임감사, 상임이사도 고위공직자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고 이해충돌 심사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LH 사안에서 본 것과 같이 사적이해관계의 미신고 행위는 일반 행정상의 신고의무 불이행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현재 과태료 부과수준에 대한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조문의 불확실성과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영호 법무법인 율정 대표변호사는 “과태료의 부과나 형사처벌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조문의 불명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공직자 등도 국민인 이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석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담보 대출 개선 촉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3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으로부터 기관별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LH 사태와 관련한 농협의 대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만희 위원(국민의힘)은 “2017~2020년 3기 신도시에 대한 농협의 농지 담보 대출은 4천530건, 1조963억 원”이라며 “신도시 지정 관련 정보들이 광범위하게 유출되는 등 농협이 투기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병길 위원(국민의힘)도 “(상호금융과 농협은행을 포함한) 농협의 3기 신도시 대출이 4조 원이 넘는다”며 “농민들에게 힘이 돼야 할 농협이 투기꾼에게 힘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농협이 LH 사태로 불거진 비농업인의 농지 투자 행위에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인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단위농협 중 순수한 조합원의 대출은 4분의 1에 불과해 비조합원 대출이 75%에 이르는 등 농협의 설립 취지를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농협 이익을 농민을 위해 쓰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지 투기 이익만 늘려주는 역할을 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협 대출이) 불법 투기 자금으로 전용된다면 잘못된 것이고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지 못한 것은 잘못했다”며 “농지 담보 대출은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이만희 위원은 “농협 임직원 중에서도 (신도시 개발) 정보를 갖고 투기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합동수사본부나 합동조사단 등 정부 차원의 조사나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서 농협 자체의 조사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조합원 자격 박탈 여부를 묻는 어기구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현재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조합원) 강제 탈퇴를 하려면 대의원 총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개호 위원장도 신도시 대출과 관련해 “대출 자체에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투기 의혹과 관련) 대출금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게 확실시되는데 회수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일반적으로 여신을 약정할 때 자금 용도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자금이 불법 용도로 이용됐다면 회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NEWS

박병석 국회의장,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이 3월 8일 공군호텔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제사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 폭력이 급증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심각성을 공감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가혹했다"면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돌봄 무게도 무거워졌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실직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디지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성의 직업 전환 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여성 정치참여의 길도 더 넓어져야 한다. 어쩌면 그것이 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면서 "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난 1월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해 의회 운영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3월 8일은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 노동자들이 결기한 날로, 1975년 국제연합(UN)

에서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와 면담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3월 2일 집무실에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와 면담을 갖고,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013년도부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활동해 온 사단법인이다.

김 부의장은 공 대표로부터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점을 청취했다. 공 대표는 "끊이지 않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범부처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청소년 부모 가정을 비롯한 취약가정들에 대한 양육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취약가정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즉자적이고 분절적인 대응이 아닌 주요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통해 범부처적 법 개정,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대표 발의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통과 의지를 밝혔다.

김 부의장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아동학대 예방, 아동 권리 옹호 활동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아이들을 대하는 시각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9차 한미일 의원회의’ 화상회의로 개최



‘제29차 한미일 의원회의(TLEP)’가 3월 5일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미일 의원회의는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2020년 제27차 회의부터는 화상회의로 개최되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대표단장으로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창현·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 의원과 프렌치 힐 의원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마사하루 나카가와·이노구치 쿠니코·야마모토 고조·마키야마 히로에 의원이 참석했다.

회의 의제는 ‘각국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2021 경제전망’으

로 선정됐다. 각국 의원들은 코로나19를 대비하는 각국의 보건·방역 정책 현황 및 경제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3국 대표단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한 각국 정세를 소개하며 현재까지 어떠한 정책을 추진했는지 소개하고 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또 각국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소개하고 향후 경제 성장 및 발전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이 외 백신 공급 현황과 목표를 공유하고 신속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미일 3국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미일 의원회의는 통역 없이 영어로 진행되며 회의과정 및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회의는 지난 18년간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와 의원 간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통해 한미일의 정치·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원가검증자문단’ 출범

국회가 개원 이후 최초로 원가검증자문단을 운영한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주요 재정사업의 원가를 계약단계에서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회원가검증자문단’을 출범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1월 취임 후 “재정수요가 증가할수록 국가기관의 철저한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 주요 재정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증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계약을 통해 집행되는 재정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의 원가 산정 → 조달청 검토’ 과정에서 원가가 적정하게 책정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외부 자문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원가검증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국회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원가 산출로 국민의 세금을 내실 있게

NEWS

집행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원가검증자문은 2020년 국회사무처 계약액(824억 원)의 76%(625억 원)를 차지하는 공사(184억 원)·정보화(368억 원)·방송(73억 원) 분야에 시범도입하고, 분야별 자문위원은 각각 7인(총 21인)을 위촉하며, 자문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공사 분야는 건축·기계·전기·통신으로, 정보화 분야는 SW·정보보안·HW로, 방송 분야는 프로그램·방송장비·카메라로 세분화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다양하게 확보할 예정이다.

이 총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는 국가재정 부문에서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된다”며 “국회원가검증자문단은 복잡·다양화된 재정사업의 원가를 면밀히 검증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원가검증자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계약의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합리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국회 디지털 대혁신’ 주문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디지털

국회 대혁신을 위한 실행계획을 의결하며 “국회가 디지털 대혁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사무처는 3월 25일 2021년도 제1차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의원실 AI 인턴 등 ‘지능형 의안정보시스템’, 재택근무시스템, 의원별 개인홈페이지 제공, 지능형 회의록 시스템, 온라인 방문자 예약 시스템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국회 대혁신 세부과제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1호 벤처조직인 ‘디지털 국회 추진단’은 국회 정보화 추진의 3대 비전으로 연결된 개방형 국회, 종이 없는 지능형 국회, 디지털 돔 국회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국회의 디지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는 각 세부과제들의 효과성·업무 적합성·핵심기술 성숙도 등에 대한 검토와 기관 내·외부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연도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의결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년에는 의원실 AI 인턴(가칭), 유사법률안 추천, 의정자료 통합검색 등을 위한 ‘지능형 의안정보시스템’을 구현하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한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재택근무 시스템(VVA-NA)’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의원별 정보제공 및 성과홍보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서비스로 개편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지능형 회의록 시스템’을 구축해 국회의 지능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의원실 및 부서별 디지털 협업을 위한 ‘의원실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의 지시로 가동되고 있는 ‘국회 출입제도 개선 TF’에서는 방문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온라인 방문자 예약 시스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디지털 국회 추진단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된 ‘국회 대혁신 세부과제 실행계획’을 의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회 관련부서는 실행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과 이행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위원장인 김병관 국회의장 디지털혁신 자문관은 “수요자 중심의 국회 정보서비스 구현이 디지털혁신에서 중요하다”며 “국회 각 소속기관 홈페이지의 통합로그인 및 통합 네비게이션 바 구현을 통해 국회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보다 안전한 정보보안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 각 소속기관 전체가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국회도서관, 제12차 ‘SI와 국회포럼’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3월 9일 제12차 ‘SI와 국회포럼’인 ‘인공지능과 윤리’ 세미나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S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 보장, 다양성 존중, 책임성 등의 윤리적 쟁점을 논의하고,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의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발제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중기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조동관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이 참여했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윤리의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이루다’ 논란 등 최근에 발생한 인공지능 차별 문제의 주요 원인과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논의를 전개했으며, 인공지능 윤리 과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오늘 포럼은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자리였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사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3월 16일 ‘공직선거에서의 온라인투표 관련 에스토니아·스위스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5호, 통권 제15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공직선거에서 온라인투표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에스토니아와 스위스의 입법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에스토니아는 ‘의회선거법’에서 의회의원을 온라인투표(i-Voting)를 통해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온라인투표는 유권자가 인터넷에 연결된 전 세계 모든 컴퓨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정된 사전 투표기간 동안 유권자가 신원확인(ID) 카드 또는 모바일 ID를 사용해 시스

NEWS

템에 로그인하고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자의 신원은 집계를 위해 중앙선거위원회(National Electoral Commission)에 도달하기 전에 온라인투표 용지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스위스는 온라인투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참정권에 관한 연방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표의 실시, 그에 필요한 인증 및 보안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서로 다르게 구성, 여러 시스템에 분산하고, 그 중 일부는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하거나 우편으로 투표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과 정보통신기술(CT)의 발전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맞는 투표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투표는 생활 친화형 모바일기기(휴대전화기, 태블릿 PC 등)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정확하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 업무의 효율은 물론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3월 8일 발간했다.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 국민 무상백신 접종 지원을 위해 정부는 2021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지 약 3개월 만인 3월 4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지출 증가분은 15조 원 규모이며,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야는 ①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 지원에 8.1조 원, ②일자리 창출 등 긴급 고용대책에 2.8조 원, ③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대책에 4.1조 원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6조 원, 한

국은행 결산잉여금 0.8조 원, 기금 여유자원 1.7조 원의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있으나, 국채발행도 9.9조 원 이루어지는 만큼 국가채무는 965.9조 원으로 GDP대비 48.2%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리재정수지는 2021년 본예산에 비해 13.5조 원만큼 적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됐으며,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추경안의 편성요건·재원·재정건전성·경제여건 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분석했고, 2장에서는 각 부처에 편성된 개별사업들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필요성·효과성, 사업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심층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1 대한민국 재정'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최신의 재정정보 제공을 통해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2021 대한민국 재정'을 발간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침체로 올



해 세계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여건도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조치 등으로 인한 소비와 고용부진으로 경기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불확실한 경제여건 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결산 심의기관인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2021 대한민국 재정’은 재정 총량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1 주요 재정지표’를 포함해 총 3부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우리나라 재정체계 및 주요 재정제도를 정리했다. 특히 올해에는 국가연구개발(R&D) 예산안 편성 과정, 연기금투자, 국유재산 등 주요 재정제도에 대한 서술을 신설하고 재정 과정별로 재정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보강했다.

제2부는 2021년도 예산·기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심의내역을 다루고, 제3부는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처의 재정 현황과 주요 재정사업을 정리했다.

또한 입법 및 예·결산 심사에 필요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 경제와 관련된 주요 통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의 통계표를 제공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물 환경 정책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3월 9일 한국물환경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김성원·이용선 의원실이 주최하는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물 환경 정책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코로나 등 각종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 방안을 물 환경 측면에서 찾아보고, 이를 위해 우리사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발제와 도출된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국회 등 각계 다섯 명의 전문가가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로 발표한 이영성 충북대 의대 교수는 ‘공중보건 감시망으로서의 스마트시티 응용플랫폼’이라는 주제를 통해 도시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인터넷망이 발달한 나라는 ICT에 기반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K-방역을 발전시켜 나아가 한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하수 기반 역학’ 발제를 맡은 김성표 고려대 교수는 하수가 그 지역 주민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새로운 전염병 방역 체계의 하나로 개발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없이 새롭

NEWS

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건하 한남대 교수는 ‘바이오시큐리티 사회간접자본 확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구제역,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급하게 조성된 대규모 매몰지가 3년이 지난 이후에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매립폐기물이 부적절하게 퇴비의 형태로 토양에 살포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빗물과 같은 물순환 체계를 통해 퍼져나갈 수 있는 고리를 차단하는 관련 법령 정비가 마련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후 류재근 한국환경기술연구원연합회장의 사회로 조길형 국회환경포럼 사무총장, 최병환 환경과사람들 상임대표,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최영남 경기도 수질정책과 과장, 홍경진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의 순으로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직진단위원회 위촉식’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월 12일 국회입법조사처 부속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조직진단위원회 위촉식’을 개최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직진단위원회는 올해로 개청 14주년을 맞이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출범했으며, 의회 및 입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은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위원 소개, 위원장 선출, 위촉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위촉식 종료 후에는 김의영 위원장(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조직진단위원회 1차 회의가 진행됐다.

조직진단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의영 교수를 비롯하여 김민전 경희대 교수, 김영일 한국기계연구원 교수, 류재우 국민대 교수, 박순애 서울대 교수,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원종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 이인용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이정철 서울대 교수, 최준영 인하대 교수로 구성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직진단위원회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지원서비스 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문화·종합화되는 입법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국회의 종합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약 2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및 서면 회의 중심으로 운영되며, 최종 결과물로 국회입법조사처 조직진단결과와 조직발전방안 등을 포함한 조직진단결과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13·14호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3호(표제: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 GDELT를 중심으로)와 제14호(표제: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를 발간했다.



제13호 저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동 보고서에서 전 세계 언론 기사를 수집하고 코드화해 제공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GDELT(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 and Tone)를 활용해 한·일, 한·중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연구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대 후반에 한·일, 한·중 간 벌어졌던 주요 갈등 및 무역분쟁 사례와 GDELT에서 나타난 데이터의 패턴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갈등 양상이 GDELT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가 간 갈등의 양상을 시계열화해 보다 직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제14호에서 정훈 연구위원은 동 보고서에서 한국 에너지전환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에너지 전환 정책 현황과 글로벌 지수 평가 결과 검토를 통해 향후 방향성에 대해 모색했다.

정훈 연구위원은 국가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선의 에너지 정책 경로를 결정할 필요성,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수립과 지속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시민 참여 확대 필요성,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 정책 이행과정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연구진이 주요 미래 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다.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공동위원장 2인 위촉



박병석 국회의장은 3월 2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임혜숙 이사장을 국가중장기 아젠더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을 통해 아젠더위원회는 기존의 성경룡 위원장과 함께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됐다.

이날 행사는 위촉식에 이어 위원회 전체회의로 진행됐다. 전체회의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미래상 및 국가아젠더별 핵심이슈 등을 토론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도출할 국가미래비전 보고서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불평등, 기후위기, 고령화 등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연구하기 위해 국회의원 직속으로 설치됐으며,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원회의 간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국회 역사의 기록자로서 책임도 막중하고 보람도 커요”



권초롱
의사국 의정기록2과 주무관

Q 국회에서 언제부터 근무하셨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 대학을 졸업한 1998년은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로 많이 힘든 때였어요. 취업전쟁의 한가운데서 한글속기라는 걸 알게 돼 자격증을 땀고 곧바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속기사로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잘 맞는 업무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첫 직장은 법원이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정치 뉴스를 보다 본회의장 한가운데 속기석에 눈길이 갔어요. 속기사라면 누구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속기하기를 꿈꾸거든요. 너무나 그 자리에 앉아보고 싶어 잘 다니던 법원을 그만두고 국회 속기직 시험에 도전해 2004년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Q 의정기록과의 주요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A 의정기록과에서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등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기록하고 이를 회의록으로 생산합니다. 생산된 회의록은 발간을 거쳐 책자로도 보존하고 전자회의록으로 인터넷에 공개도 합니다. 근래에는 의정기록과의 업무가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의원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원별 발언을 각각 발췌해 제공하고 있고, 기존의 서면질문서나 답변서뿐 아니라 질의 중 제시되는 영상이나 PPT 같은 시청각자료도 전자회의록에 신기 시작했어요. 또 이미지 상태로만 보존됐은 60~90년대 회의록을 텍스트화하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회의록은 이 사업을 통해 한글화되고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변모되는데 한국 근현대 정치사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주무관님의 담당업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A 저는 회의록 생산 공정의 1단계라 할 수 있는 현장속기를 하고 그 초고로 회의록 원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는 환경노동위원회를 담당하면서 본회의, 예

결위, 인사청문회 등의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요. 근래 환노위는 탄소중립과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 관련 의제들로 주목받고 있어요. 시대적 과제인 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속기업무 외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업무는 교육입니다. 회의장 속기사석을 보시면 어떤 때는 1명, 어떤 때는 2명, 본회의장은 4명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갓 입사한 속기사는 경력 있는 선배와 한 조를 이루어 한동안 함께 회의장 출입을 해야 합니다. 원고 작성의 기본부터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법, 특히 회의록 체계에 대한 사항을 선배로부터 하나하나 배워야 하거든요. 오청이나 문어·구어 간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변문 과정에서 발언의 의도가 왜곡될 위험도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하답니다.

Q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업무 고충은 어떤 게 있나요?

A 코로나19 이후 의원석, 속기석 가릴 것 없이 비말차단 가림막이 설치됐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의장 내 소리 전달력이 확연하게 떨어졌어요. 소리가 불명확할 때는 구화(口話)로 유추해 기록에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마스크 때문에 그 또한 여의치가 않고, 돌발적인 발언이 있을 때는 입 모양이 보이지도 않고 얼굴조차 익숙지 않으니 발언자가 누구인지 놓치는 경우가 생길까 봐 요즘 늘 초긴장 상태에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결위 회의실은 여타 상임위에 비해 몇 배는 더 크다 보니 코로나19 이전에도 청취 불능 상황이 발생하는 거의 유일한 회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와 차단막이 설치된 작년 정기국회에서는 청취 불능 상황이 40여 회나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또 원격 영상 회의로 치러진 외통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도 통신 장애로 발언의 일부분이 망실되기도 했고요.

Q 그 밖에 의정기록과에서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보람이 있으면 같이 소개해주세요.

A 지난 1월 입양아동 학대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행안위에서 열렸는데 서영교 위원장이 “이게 얼굴입니다, 아이의 얼굴”이라는 발언과 함께 준비했던 영상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는데 그 사진을 보는 동시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기록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때는 그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본회의에만 속기사가 투입됐습니다. 그러다가 기록보존에 대한 의식이 성장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면서 국회는 모든 회의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또한 회의록의 변조로 역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의록상의 발언은 삭제하지 못하도록 법제도로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속기사는 누군가의 영리를 위한 삭제 지시에도 당당하게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토록 막중하다는 것에 고단한 업무임에도 깊은 위로와 응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저를 작동하게 하는 힘입니다.

Q 앞으로의 포부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A 모든 정책, 모든 논쟁, 모든 사건이 모이는 국회에서 그림자처럼 말들을 따라다니다 보면 기쁘고, 화나고, 재미난 수많은 이야기거리와 만나게 돼요. 그런 소재들을 차곡차곡 모아 현업에서 벗어날 즈음엔 이야기책을 하나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을 실행하려면 현업에 있는 동안 더욱 충실하게 업무에 집중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열 살 어린 소년이 전장에서’와 ‘10살, 어린 소년이 전장에서’의 미세한 차이에도 고뇌하며 역사를 기록하는 이 일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하려고 합니다. 소리 없는 기록자, 침묵의 블랙박스인 속기사로서 말이지요. 🍵

글 김현아 사진 임진완

실패를 기회로 바꾼 불굴의 중앙아시아 국가, 월지(月氏)



유라시아 대륙은 북위 40도에서 60도 사이 형성된 거대한 초원지대로 연결되어 있다. 동쪽으로는 만주지방에서 서쪽으로는 헝가리에 이르는 광대한 초원지대는 물자 이동뿐 아니라 민족 이동의 통로였다. 유목민들이 이 초원을 따라 이동하면서 중국, 중앙아시아, 인도, 페르시아, 그리고 유럽 등지를 정복하고 제국을 세웠다.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이를 촉발한 훈(Hun)족의 이주, 뒤이어 투르크와 몽골 제국의 건설이 모두 스텝(Steppe)이라고 불리는 중앙유라시아 초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 면에서 초원은 본거지에서 쫓겨나 유랑을 거듭하던 유목민들이 재기를 노릴 수 있는 기회 땅이었다. 흉노(匈奴)에 패배해 도주했지만 중앙아시아와 인도에서 쿠산(Kushan) 제국을 건설한 월지(月氏)에 대해 살펴본다.



월지의 위치

월지(月氏)는 기원전 2세기까지 중국 서북부 간쑤(甘肅) 지방 서북쪽과 내몽골 중서부에 거주하고 있었다. 월지의 선조는 기원전 2000년경 인도유럽어족의 이동으로 타림분지 동쪽에 정착한 토하라(Tochara)인들이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편찬된 ‘관자(管子)’에는 ‘옥(玉)이 우지(禺氏) 지방에서 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지는 월지의 별칭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타림분지 남부 호탄(Khotan)에서 추출된 옥이 우지 혹은 월지를 거쳐 중국으로 유입됐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월지는 동서교역로에 위치해 있으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진시황의 중국 통일 이후 한(漢)나라가 건국되기까지 월지는 중앙유라시아 동부 초원지대에서 막강한 세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 위세에 놀려 흉노는 월지에 왕자를 인질로 보내야 했다. 월지는 이후 서북부로 팽창해 오늘날 일리(ILI)강 유역에 위치해 있던 또 다른 유목국가 오손(烏孫)을 격파했다. 월지와

전투에서 패한 오손의 지배층은 흉노로 망명하는 수밖에 없었다.

흉노가 초원의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세력 약화

그러나 기원전 200년경부터 흉노가 초원의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월지의 세력도 점차 약화됐다. 월지에 볼모로 잡혀있던 흉노의 왕자 목득(冒頓)이 귀환해 아버지 두만(頭曼)을 죽이고 군주인 선우(單于)가 되면서, 월지를 향한 흉노의 공격이 시작됐다. 최소 3차에 걸친 흉노의 파상공세에 월지는 본거지였던 간쑤지방과 내몽골 및 일리강 유역에서 축출됐다. 월지의 피해는 막심했다. 심지어 목득선우의 아들 노상선우(老上單于)는 월지왕을 잡아 죽이고 그 두개골을 잘라 음료를 마시는 잔으로 만들 정도였다.

흉노의 공격으로 멸절 위기를 맞은 월지는 필사적인 탈주를 거듭한다. 중국 측 역사서술에서 대월지(大月氏)라고 부르는 잔존세력은 서북쪽으로 도주

했다. 그러나 일리(ILI) 지역에서도 월지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자 하는 오손의 공격을 받아 다시 도망가야 했다. 결국 월지는 천산산맥을 넘어 페르가나(Ferghana) 지역을 거쳐 중앙아시아 아무다리야(Amu Darya)강 유역으로 이주하는 수밖에 없었다. 한편 월지의 또 다른 일부는 티베트 고원으로 들어가 현지인들 사이에서 거주했는데, 이들은 소월지(小月氏)라고 불렸다.

한(漢) 무제(武帝)가 장건(張騫)을 서역으로 파견한 이유도 바로 흉노의 적 대월지(大月氏)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흉노가 월지의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에 장건은 월지로 가던 도중에 흉노 측에 체포되어 10년이 넘도록 흉노 땅에서 강제로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자신이 맡은 소임을 잊지 않은 장건은 결국 탈출에 성공해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대월지의 땅에 다다를 수 있었다.

장건이 방문한 대월지는 이미 새로운 터전에 자리 매김하고 있었다. 흉노에 살해된 월지왕의 아들이 군주가 되었고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남부와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걸쳐있던 그리스계 박트리아(Bactria)를 정복했기 때문이다. 풍요로운 생활 속에 안락을 누리던 대월지는 흉노에 복수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결국 장건은 대월지와 한나라의 동맹을 성사시키지 못한 채 귀국해야 했다. 그러나 장건의 여행을 통해 중국에 기원전 2세기 중반 중앙아시아의 상황이 소개되었고, 이는 한나라의 서역원정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월지의 박트리아 정복은 스트라본(Strabon)이나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 트로구스(Gnaeus Pompeius Trogus) 등 로마 역사가들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이들은 월지를 스키타이(Scythians) 또는 사카(Saka)와는 구분하여 ‘토하로이(Tocharoi)’ 또는 ‘토하리(Tochari)의 왕족 씨족 아씨아니(Asiani)’로 지칭했다. 중국 측 기록에도 스키타이 및 사카를 뜻하는 ‘색(塞)’과 월지를 구분했다. 그러나 박트리아 침공 단계에서는 월지 휘하에 일부 스키타이-사카계 부족민들이 편입되어 정복사업에 참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토하리-사카의 연합체는 로마에 맞서던 이란의 강국 파르티아(Parthia) 제국과 충돌했다. 로마의 역사가 유스티누스(Justinus; 영어로 Justin으로 표기)에 따르면 기원전 128년부터 벌어진 파르티아-토하리(월지) 전쟁에서 파르티아의 군주 프라아테스(Phraates) 2세는 전사하고, 그의 숙부이자 계승자였던 아르타바누스(Artabanus) 1세는 치명상을 입어 기원전 124년경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월지의 군사력은 이 시기 세계 강대국이었던 파르티아에 맞서 결코 뒤지지 않았다.

박트리아를 점령한 월지의 물질적, 문화적인 성취는 1978년 아프가니스탄 북부 툴랴 테페(Tillya Tepe)에서 발굴된 유물에서 잘 나타난다. 2만 점이 넘는 유물 중 특히 황금 장신구가 대량으로 출토됐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4~5세기 신라의 금관을 연상시키는 황금 왕관이다. 그 양식적인 유사성을 고려할 때 월지의 영향이 신라에 전파된 것임이 틀림없다. 단지 그 루트가 육로를 통한 것인지, 해로를 통한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카니슈카 1세의 금화 (출처 Classical Numismatic Group)

인도에 쿠산 제국 세운 월지

한편 월지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점령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기원후 1세기경 월지 휘하 5개 지방 제후들 가운데 한문으로 귀상(貴霜), 인도어로는 쿠산(Kushan)으로 알려진 가문이 정권을 장악하고 인도 북부를 포함하는 제국을 세웠기 때문이다. 중국의 '후한서(後漢書)'에 구취각(丘就卻)으로 표기된 쿠줄라 카드피세스(Kujula Kadphises)는 기원후 1세기경 쿠산 제국을 창건해 파르티아로부터 아프가니스탄 동부 카불(Kabul) 지역을 빼앗고 인더스강 상류로 진출했다. 쿠산 제국은 쿠줄라 카드피세스의 증손자인 카니슈카(Kanishka) 1세의 치세 전성기를 맞았다. 그가 세운 라바타크(Rabatak) 비문은 카니슈카 1세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서북부 전 지역과 동부 갠지스(Ganges)강 유역의 힌두교 성지 바라나시(Varanasi) 지방까지 정복한 것을 증명하고 있다.

쿠산 제국은 정치적으로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렸다. 기원전 1세기부터 이집트와 인도 사이 인도양 횡단 무역이 발달한 것도 쿠산 제국의 경제적 발전을 견인했다. '후한서'에서 "부유하고 융성했다(富盛)"고 지칭할 만큼 쿠산 제국은 풍요로웠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성공을 바탕으로 쿠산 군주들은 스스로를 "대왕, 왕중의 왕, 하늘의 아들"로 칭했다. '천자(天子)'를 자칭하는 모습은 흉노에 쫓겨 도주하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스스로의 위상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강성했던 인도의 쿠산 제국이 내몽골과 중국 서북부의 월지에서 비롯된 것은 중앙아시아가 민족 이동의 루트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흉노의 공격으로 멸망 직전에 이르렀던 월지가 쿠산 제국으로 부활한 사실은 실패를 기회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중앙아시아인들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하겠다. 🍀

글 이광태(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일러스트 윤소영(soyoungyun.com)

싱그러운 숲내음 맡으며 드넓은 바다 볼 수 있는
바다향기수목원(경기 안산)



드론으로 촬영한 바다향기수목원 전경



바다향기수목원 입구



고래화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에 자리한 ‘바다향기 수목원’은 싱그러움 풀내음을 맡으며 드넓은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숲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수목원이다. 지난 2019년 5월 문을 연 이곳은 약 30만 평에 달하는 규모로, 약 1천 종의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은 장미원 등 19개의 주제원을 갖추고 있으며 서해안에서 많이 자라는 소사나무와 곶술 등도 볼 수 있다. 전망대에 오르면 서해와 시화호가 한 눈에 들어온다.

수목원 입구에 들어서면 형형색색 꽃들과 피노키오가 관광객을 맞는다. 고래를 모티브로 조성해 높은 곳에서 보면 고래 모양으로 보이는 ‘고래화단’이다. 방문자센터를 지나면 벽천(壁泉: 장식으로 벽에서 흘러내리는 샘)이 눈에 띈다. 바다향기수목원 측은 “현재 식물원 곳곳에서 보완공사와 식재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꽃이 피는 5월쯤이면 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폭포 왼쪽에는 황칠나무, 시로미, 송악, 애기동백 등 50여 종, 1천400여 그루의 식물이 자라는 유리온

실인 ‘전시온실’이 자리하고 있다. 난대식물과 해양성 식물을 보전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생김새와 촉감이 양의 귀와 비슷하다고 하는 ‘램스이어’를 비롯해 흥미로운 식물들이 많다. 천장에는 공중에 식물을 매달아 키우는 걸이용 화분(행잉 플랜트)도 있다. 온실 곳곳에는 아기자기한 조형물도 있어 관람의 재미를 더한다. 전시온실은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은 상태다.

전시온실 주변에는 다른 수목원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염생식물원’과 ‘도서식물원’, ‘모래언덕원’ 등이 있다. 갯벌이나 바닷가 모래땅에 서식하는 크고 작은 식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염생식물원에서는 소금이 있는 바람이 불거나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갯잔디, 갯질경이 등을 볼 수 있다. 도서식물원에는 대부도 도로 건설현장에서 자라는 나무를 옮겨 심었다. 모래언덕원에서는 통보리사초, 모새달, 해당화 등 모래에 서식하는 대표 식물을 만날 수 있다.

전시온실을 지나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보이는 ‘바



전시온실

다너울원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이끈다. 바다가 너울 거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생태 연못이다. 대홍산 계곡물을 모아 만들었다고 한다. 계절에 따라 우아한 연꽃이 피는 곳이다. 3월 초라 꽃들을 만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여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한 바퀴 산책하기에 좋은 곳이다.

‘바다너울원’을 지나면 흥미로운 주제원들이 차례로 등장한다. 먼저 인공연못 12개를 연결한 심청연못이다. 인당수를 상상해 이름 붙인 곳으로 물이 졸졸 흘러 어린 관람객들이 특히 좋아하는 곳이다. 다음은 수목원 근처 황금산에서 가져온 황금색 바위

를 쌓아 올린 ‘황금바위원’이 나온다. 황금산은 과거 황금이 묻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다른 수목원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의 장소다. 이곳에는 바위와 어울리는 황금실화백, 황금편백 등을 심었다.

황금바위원을 지나면 계절에 따라 관람객들에게 ‘포토존’으로 사랑받는 장소들이 나온다. 바로 ‘장미원’과 ‘억새원’, ‘대나무원’ 등이다. ‘장미원’에서는 5월부터 늦여름까지 ‘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미가 매혹적인 향기를 뿜낸다. 땅장미와 덩굴장미 등 1천 300여 본의 장미를 심었다. 특히 ‘대나무원’은 지역



'상상전망대'에 오르는 길



전망대에서 보이는 바다 풍경

주민들이 기증한 대부도 대나무로 만들었다. 바람에 사각거리는 댓잎 소리가 일품이다. '억새원'은 언덕에 참억새를 심어 멋진 경관을 연출한다. 억새밭 사이로 탐방로가 있어,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억새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 좋은 곳이다.

바다향기수목원의 랜드마크 '상상전망대'

언덕을 따라 오르면 바다향기수목원의 랜드마크인 '상상전망대'가 보인다. 처음에는 '상상전망대'의 오기인가 싶었지만 '상상전망대'가 맞는 표기다. '모든 상상이 전망되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전망대까지 가는 오르막길은 깨진 도자기 조각으로 만들었다. 폭 5m에 길이 70m에 이르는 언덕길을 파도와 물고기, 구름, 하늘, 태양 등의 모양으로 꾸몄다. 상상의 나라를 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망대까지 오를 수 있다. 전망대를 오르는 길 입구에 있는

'기억상자'는 고깃배 두 척을 맞대어 붙인 알 모양의 철제 조형물이다.

전망대에 오르면 탁 트인 서해와 시화호가 한눈에 들어온다. 맑은 날에는 충남 당진까지 보인다고 한다. 시원한 바닷바람에 마음까지 뽕 뚫리는 기분이다. 저녁 늦게는 서해안의 낙조를 감상하기에 맞춤형 곳이다.

이 밖에도 바다향기수목원은 소공연장, 쉼터,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과 5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봄·가을은 오전 9시~오후 6시, 여름(6~8월)은 오전 9시~오후 7시, 겨울(11~2월)은 오전 9시~오후 5시이며 입장료는 없다. 매주 월요일, 1월 1일과 설날에는 쉰다. 매점과 쓰레기통이 없어, 쓰레기는 가져가야 한다. ☺

경기 안산 | 글 박민선 사진 김진원

북미 원주민들을 파멸시킨 '천연두'



현재의 미국과 캐나다인 북미 대륙에는 원래 약 1천400만 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대략 16세기 말엽부터 대서양을 건너 유럽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이 원주민들은 불과 200년 만에 거의 모든 땅을 유럽인들한테 빼앗기고 척박한 황무지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바로 유럽인들로부터 원주민들에게 감염된 전염병인 '천연두' 때문이었다. 유럽인들은 고향인 유럽에서 천연두가 널리 퍼진 상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천연두에 대해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었다. 하지만 북미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외부 세계와 고립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천연두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고, 그래서 원주민들은 천연두에 걸리기만 하면 거의 대부분 그대로 쓰러져 죽어나갔다.

한 예로 북미로 이주했던 영국인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천연두에 걸린 원주민들을 두고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원주민들에게 이보다 더 혹독한 질병은 없을 것이다. 침대와 이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보통 딱딱한 매트 위에 누워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앓고 있는 병의 상태가 매우 심각해진다. 천연두에 걸린 원주민들의 상처는 곱고 딱딱한 매트 때문에 피부는 갈라진다. 그들이 돌아누우면 피부가 벗겨지고 끔찍하게 엉긴 핏덩어리가 몸 전체에 가득 차게 된다. 천연두가 점점 악화되면 원주민들은 썩은 양의 시체처럼

죽어간다.”

1617년 영국에서 지금의 미국 땅으로 이주해 온 청교도들은 북미 원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현재 미국 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에 천연두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3년 만에 뉴잉글랜드 해안가 거주민의 96%가 천연두에 감염됐고, 원주민 사회를 황폐화시켰다.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영국인 로버트 커쉬먼은 “단지 20명이 간신히 살아남았다”라는 기록을 남겼다. 순식간에 너무나 많은 원주민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자, 살아남은 원주민들은 쌓이는 시체들을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어서 마을을 떠나 이웃의 다른 부족들에게 달아났다.

하지만 이렇게 달아난 원주민들도 전염병에 걸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한 다른 원주민들도 전염병에 걸려서 차례차례 죽어갔다. 이렇게 죽은 원주민들이 어찌나 많았던지, 영국인 하워드 심슨은 자신이 직접 본 모습에 대해 “돌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마을은 황폐한 상태였다. 죽었지만 매장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수천 인디언의 뼈와 해골이 땅에 나뒹굴었다”고 기록했다. 그로부터 15년 동안 매사추세츠 부근의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천연두가 계속 퍼졌다.

유럽인들, 원주민들 신의 뜻에 따라 죽은 것이라 여겨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유럽인들은 원주민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는 것은 신의 뜻이라고 믿었다. 매사추세츠 해안의 식민지 지역 지도자인 영국인 존 위스롭은 1634년에 영국에 있는 친구에게 이런 내

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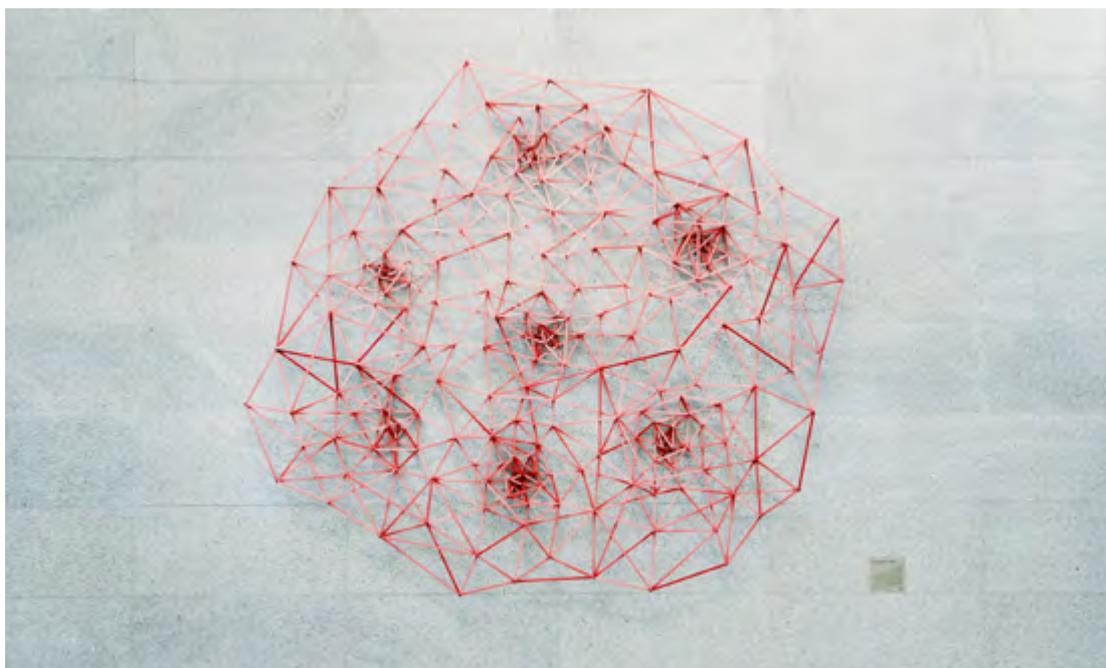
“신은 이 지역에 사는 원주민을 내쫓았다. 480km 이내의 원주민 지역 대부분이 천연두로 말살됨으로써 신은 우리가 이곳을 차지할 명분을 확실히 해주고, 이 지역에 남아 있는 50명도 안 되는 원주민들 스스로가 우리의 보호 안에 들어오게 됐다.”

1840년에 조지 캐틀린은 백인과 접촉 당시 북미 원주민의 인구를 1천400만 명으로 추정하면서 200만 명만이 살아남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880년에 살아남은 원주민들의 수는 25만으로 격감했는데 이는 98%가 줄어든 숫자였다. 캘리포니아의 원주민 인구는 1769년에는 30만 명이었지만 천연두 때문에 100년 후에는 3만 명으로 줄었다. 1650년 어느 북미 원주민은 한 네덜란드인에게 “당신네 백인들이 와서 천연두가 퍼지기 전까지 우리들은 지금보다 10배나 인구가 많았소”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미 대륙의 원주민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인원으로 첫발을 내디뎠던 유럽인들이 불과 200년 만에 원주민들을 굴복시키고 북미의 주인이 된 비결은 천연두 때문이었다. 만약 북미 원주민들이 아시아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처럼 천연두에 대해 강력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짧은 시일 내에 수많은 인구가 감염되어 죽어나가는 참상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며, 유럽인들이 북미를 식민지로 삼기에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거나 어쩌면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

글 도현신 작가

과학예술의 최전선에서



김주현, 'Self Expansion-The One (자기확장법-더 원)', Aluminium, Urethane painting, 300×310cm, 2013

과학과 예술을 이성과 감성, 진리와 가치 등으로 나뉜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유사 이래 현재까지의 유구한 전통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과학과 예술이 바짝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과 예술 양자 사이를 매개하는 키워드는 '기술'이다. 한자어에서 예술과 기술 모두 '術'자를 공유하고 있듯이, 서구에서도 'art'와 'technology'는 'ars / techne'와 같은 글자를 공유하고 있다. 즉 근대 이후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근대 이전에 '기술'이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맥락

속에 존재한다.

과학도 마찬가지다. 과학이라는 개념이나 정신은 기술적인 실행 단위의 물질적 실체를 거쳐 현현하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예술과 기술, 과학과 기술, 그리고 예술과 기술과 과학의 '저 친밀한 관계 맺음은 예술과 과학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역할을 한다. 과학과 예술은 기술이라는 교집합을 가지고 상호보완적인 메카니즘을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과학	기술	예술
진리	도구	가치
이성	방법	감성

국회 의원회관 2층에 자리잡은 김주현의 'Self-Expansion-The one(자기확장법-더 원)'은 피보나치 수열을 시각예술로 구현한 시각예술 작품이다. 3미터 크기의 원형 부조로 구현한 이 세계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변수로부터 순차적으로 여타의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는 수리 세계의 구조를 담아내고 있다. 피보나치 수열은 '1, 1, 2, 3, 5, 8, 13, 21,'와 같은 순서로 증식하는 수의 나열이다. 평면 위의 숫자로만 볼 수 있는 개념의 세계를 물리적 공간으로 보여주는 일. 김주현이라는 예술가를 통해 명증하게 드러나는 과학예술의 순간이다.

김주현의 작품은 3차원 공간의 재현에 그치지 않

고 그 이상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조소를 전공한 그는 선과 면, 양감(volume)과 쾌감(mass) 등 조소예술의 본질적인 요소들로 3차원 공간을 구성하되, 그것이 3차원을 재현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3차원의 공간적 구조를 구현하면서도 그 너머의 새로운 차원을 구현하고자 노력해왔다. 다시 말해서 김주현이 추구하는 공간은 역동하는 구조로서의 공간이다.

회화와 조소의 차이를 가지고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 현실 속에 존재하는 대상을 재현하는 시각 예술의 경우를 놓고 비교해 보면, 2차원의 평면을 다루는 화가들은 3차원으로 존재하는 사물들을 2차원의 평면으로 환원하는 작업을 한다. 조소는 3차원의 공간적 실재를 3차원의 공간적 구조물로 재현할 수 있다. 그런데 수학적 원리나 과학적 논리와 같이 개념으로만 존재하고, 실재의 물질적 구조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 회화는 2차원의 평면 위에 '그림 그리기' 방식으로 나타내는 반면, 조소는 그것을 3차원의 공간으로 나타낸다. 그런 점에서 김주현은 평면에 비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세계를 구축한다.

자연에 담긴 과학적 원리 탐구에 관심

애초부터 김주현은 자연계의 현상에 주목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 현상을 재현하거나 자연에서 나타나는 표피적인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창작을 하는 것은 아니다. 김주현의 세계는 자연미술과는



국회 의원회관 2층에 전시된 'Self Expansion-The One'

다소 거리가 있다. 그는 보이는 것으로서의 자연 보다는 그 속에 담겨있는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김주현은 자연계의 현상 속에 담긴 과학적 본질에 대해 파고든다. 이를 위해 그는 수학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인문과학이 문자나 구두의 언어에 기대어 세계를 구축하는 작품이라면, 자연과학은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 세계를 구축하고 소통한다.

조소 작업을 해오던 그는 2008년 이래 '위상수학(Topology)'을 통해 작품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공간 속의 위치나 형상에 관한 학문인 위상수학을 통해 그는 '크기나 모양이 달라도 궁극적으로 본질이 같은', 즉 '위상이 같은' 사물의 형태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동하기 시작했다. 시각예술의 본질적인 문제인 점이나 선, 면, 공간 등의 문제

를 그는 수학적 원리를 통해 보다 과학적으로 풀어냈다. 수학뿐만 아니라 복잡계이론과 같은 물리학적 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깊은 과학예술의 세계를 구축해왔다.

예술은 사물의 현상으로부터 본질을 추구하고, 인간에서 사회와 자연의 문제, 궁극적으로 세포에서 우주까지에 이르는 미시서사와 거대서사를 다루는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피카소의 입체주의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만나는 저 위대한 20세기의 성취 이래, 예술과 과학은 창조적 상상력을 공유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아인슈타인과 피카소가 일군 20세기 상상력의 토대 위에서, 21세기 예술가 김주현은 한 단계 더 깊이 과학예술의 세계를 일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난 20여년 간 한국사회에서도 과학 예술 융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주창하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이어졌다. 그러나 성공사례가 많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곤 한다. 예술가는 과학자를 '순돌이 아빠' 짬으로 여기고, 과학자는 예술가를 정서함양이라는 여가활동의 동반자 정도로 여기는 수준으로 과학과 예술의 융합은 난망한 일이다. 김주현의 경우처럼, 치열하게 공부하고 성장하는 태도가 있어야,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 가능태가 아니라 현실태로 나타날 것이다. 🍯

글 김준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사진 김진원



봄의 전령사, 히어리

개나리, 산수유와 함께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나무로 잘 알려진 ‘히어리’가 국회 사랑재 초입에서 노란꽃을 피웠습니다. 히어리는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을 먼저 피우는 식물로, 다양한 종보전 노력 끝에 2012년에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됐다고 합니다. 성큼 다가온 새봄, 국회에도, 나라 곳곳에도 기쁜 소식만 가득하길 기대해봅니다. 🍀

글 김현아 사진 김진원



파주 용미리 마애불입상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파주 용미리 마애불입상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의 장지산(長芝山) 자락, 용암사(龍巖寺) 뒤편으로 고려시대 마애불 한 쌍이 우뚝 솟아 있다. 보물 제93호 파주 용미리 마애불입상(磨崖二佛立像). 흔히 용미리 마애불이라고 부른다. 두 마애불은 모두 갓을 쓰고 있어 누구에게나 토속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마애불은 바위에 새겨놓은 불상을 말한다. 우리 역사에서 마애불을 가장 많이 만들었던 때는 고려시대. 현존하는 마애불 200여 구 가운데 70% 이상이 고려 때 것이다. 고려 마애불은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

곳곳에 걸쳐 조성됐다. 이것은 마애불이 미륵신앙, 기복신앙 등과 어울리면서 일반 서민들의 삶과 밀착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보니 고려시대 마애불은 서민적이고 토속적일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에서도 파주 용미리 마애불은 각별한 존재다.

용미리 마애불은 거대한 암반의 남쪽면에 조성됐다. 우리나라 마애불 가운데 2구의 불상이 함께 조성되어 있는 경우는 이것이 유일하다. 머리에는 모두 갓을 쓰고 있는데, 이를 불교에서는 보개(寶蓋)라고 부른다. 불상의 머리위를 가리는 덮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애불에 담긴 흥미로운 전설

마애불 두 구 가운데 오른쪽 불상(바라볼 때는 왼쪽)은 원형의 보개를 쓰고 있고 왼쪽의 불상(바라볼 때는 오른쪽)은 사각형(방형, 方形)의 보개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각각 원립불(圓笠佛), 방립불(方笠佛)이라 부른다. 그런데 원립불은 남자이고 방립불은 여자라는 이야기가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이들이 부부라는 이야기도 있다. 모두 파주지역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로, 용미리 마애불에는 흥미로운 전설이 담겨 있다.

고려 13대왕 선종(재위 1083~1094)은 자식이 없었다. 원신궁주(元信宮主)를 세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였지만 여전히 왕자가 생기지 않았다. 걱정이 태산 같던 궁주는 어느 날 꿈 속에서 장지산 남쪽 기슭의 바위 틈에 산다는 두 도승(道僧)을 만났다. 한 도승은 둥근 관을 쓰고 있었고, 다른 도승은 사각형의 관을 쓰고 있었다. 이들은 원신궁주에게 “항불이 오랫동안 꿇었으니 궁주가 자비심으로 향을 켜고 공양하면 그 은덕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기이한 꿈이었기에 궁주는 그 내용을 왕에게 아뢰었다. 그러자 왕은 그 곳에 사람을 보내 바위가 있음을 확인했고, 꿈에 등장한 모습대로 두 도승을 바위에 새기고 절을 세우도록 했다. 거기서 불공을 올리니 왕자인 한산후(漢山侯)를

잉태했다는 내용의 전설이다. 현재 이 마애불 가까운 곳에 용암사가 있다. 이 절이 언제 창건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아무래도 마애불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마애불의 높이는 원립불이 14.05m, 방립불이 14.18m이다. 방립불이 10cm 정도 더 높다. 원립불의 얼굴은 아래쪽이 넓은 사다리꼴이며 방립불의 얼굴은 직사각형에 가깝다. 방립불의 얼굴이 원립불의 얼굴보다 꽤 큰 편이다. 두 마애불 모두 눈은 가늘고 길며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편이다. 얼굴은 소박하고 편안하며 한편으로 다소 무뚝뚝해 보이기도 한다. 원립불은 두 손으로 가슴 앞에서 연꽃 가지를 쥐고 있고 방립불은 두 손을 합장하고 있다. 두 마애불 모두 암반에 몸체를 얇은 부조(浮彫, 돌을새김)로 표현했고 머리(불두, 佛頭)와 보개는 별도로 만들어 몸체 위에 얹었다. 원립불의 불두와 보개는 모두 6개의 돌로 이뤄져 있고, 방립불의 불두와 보개는 모두 7개의 돌로 이뤄져 있다. 몸체는 얇은 평면 조각(부조)인데 불두와 보개는 입체 조각이라는 말이다. 마애불을 이렇게 제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용미리 마애불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질적인 분위기가 한데 어울려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 가져다주는 이색적인 매력인 셈이다.

이러한 특징은 몸체 표현으로도 이어진다. 몸체 표현을 보면, 선각(線刻)과 부조가 섞여 있다. 원립불의 오른손은 선각으로 표현했고 왼손과 연꽃가지는 돌을새김으로 표현해 입체감을 부여했다. 방립불의 경우 합장하는 두 손을 부조로 표현했는데, 거의 완전한 입체에 가까울 정도다. 이렇게 신체 표현에서 선각과 부조를 함께 구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변화와 생동감을 부여했다.

용미리 마애불은 고려시대 마애불의 특징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래서 고려 때인 11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1990년대 원립불 옆쪽 바위와 방립불 하반신 부분에서 명문이 발견됐다. 그 명문에는 ‘성화(成化) 7년 7

월이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 성화 7년은 조선시대 성종 때인 1471년이다. 이를 근거로 조선 성종 때 조성한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그 명문이 후대에 추가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전체적인 양식이나 조형적 특징 면에서 고려시대 마애불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원립불이 연꽃가지를 쥐고 있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다. 원립불은 오른손으로 연꽃가지의 아래쪽을 쥐고 있고 왼손으로는 가지의 윗부분을 쥐고 있다. 그런데 연꽃이 있어야 할 왼손 윗부분에 연꽃이 보이지 않는다. 연꽃은 어디로 간 것일까. 왼손 주변을 보면 거기 구멍의 흔적이 있다. 그 구멍이 정확하게 연꽃이 있어야 할 자리다. 애초에 연꽃을 만들어 이 구멍에 꽂아놓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고려시대의 여타 석불들의 모습을 참고해보면, 용미리 마애불의 연꽃은 금속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연꽃가지를 쥐고 있는 모습은 의미가 크다. 미륵신앙의 용화(龍華)세계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원립불은 먼 훗날 중생을 구제하러 오는 미륵불이라는 말이 된다.

용미리 마애불은 조형적으로 균형미가 부족하다. 세련미도 떨어진다. 그럼에도 보면 볼수록 묘한 매력을 발산한다. 연꽃을 들고 있는 저 거대한 마애불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미래의 극락정토를 꿈꾸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용미리 마애불의 진정한 매력일 것이다. 🍵

글·사진 이광표(서원대 문화유산학 교수)



파주 용미리 마애불입상



파주 용미리 마애불입상 뒷면



대한민국 의정 종합채널 NATV

인터뷰릴레이  칭찬

세상을 바꾸는 칭찬,
세상을 바꾸는 정치!

여·야 의원이
서로에게 이어가는
칭찬 한마디와
국민이 전하는
응원 메시지

진행 **윤지영**
(前 SBS아나운서)



월~금요일 낮 1시 40분 방송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김수영 문학관

4월의 숲길에 자유의 꽃으로 피어난 시

시비에서 문학관까지
김수영 시인을 생각하며 걷는 숲길

1960년 4월 19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최초의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해마다 4월이면 민주와 자유를 외치던 그날 거리의 함성이 산천을 뒤덮은 꽃이 되어 피어난다. 그날을 기록했던 많은 사람 중 시인 김수영도 있었다. 자유의 시인 김수영의 흔적을 찾아 그날의 함성처럼 꽃무리가 피어난 북한산둘레길을 걸었다.

4·19를 위하여

4월을 4월답게 만드는 것이 있다. 산등성이 신록은 꺾데기를 뚫고 나온 새싹의 함성이다. 일제히 피어나는 꽃들은 산천을 뒤덮은 '꽃사태'다. 뿌리부터 인간힘으로 걸어 올린 생명의 빛이다. 허투루 빛나지 않는 4월을 북한산 숲길에서 만났다.

김수영 시인의 흔적을 찾아가는 길 첫머리가 지하철 도봉산역이다. 도봉산역에서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지구 쪽으로 걷는다. 상가 거리를 지나면 북한산국립공원이 나온다. 계곡을 옆에 두고 걷는 길에 김수영 시인의 시 몇 편을 읽었다.

시를 쓰는 마음으로

꽃을 꺾는 마음으로

자는 아이의 고운 숨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죽은 옛 연인을 찾는 마음으로

잊어버린 길을 다시 찾은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가 찾은 혁명을 마지막까지 이룩하자

'4·19 순국학도 위령제에 붙이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김수영의 시 '기도'의 첫 연이다. 자유의 시인 김수영은 피와 죽음으로 일구어낸 민주와 자유

를 마지막까지 꽃피워나가자고 다짐한다.

1960년 4월 19일은 풀포기 하나, 돌멩이 하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을 향해 일어섰던 민초들이 진정한 자유 시민의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지점이기도 한 날이었다.

교과서에도 실린 적 있는 그의 시 '풀'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민초들의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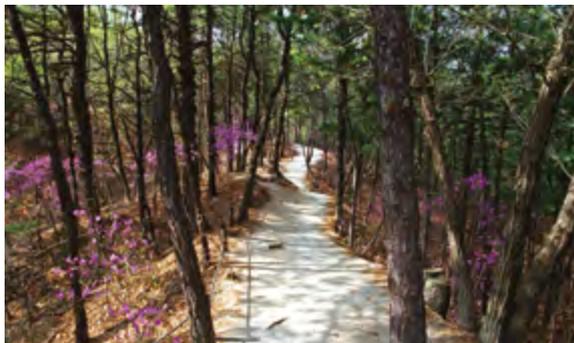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풀' 2연

등산복 차림의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는 북한산 기슭 넓은 길가에 있는 그의 시비에 이 부분이 새겨졌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풀처럼

도봉구 북한산국립공원에 위치한 김수영 시비는 그의 무덤이기도 하다. 1968년 6월 15일 밤 짐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적십자병원에서



김수영 시인의 흔적을 찾아가는 길, 소나무 숲에 진달래가 피었다.



김수영 시비에 그의 시 '풀'의 일부가 새겨졌다.



키 작은 들꽃이 무리지어 피었다.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아침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그의 주머니에서 막냇동생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나왔다. 메모가 습관이었던 시인은 메모지가 없을 때에는 담배종이, 서류봉투 등 글씨를 쓸 수 있는 것에 메모를 했다. 메모가 시로 완성되는 시간은 고스란히 시인의 몫이었다. 쪽지에 적은 막냇동생의 이름, 시인은 막냇동생에 대한 시를 쓰고자 했던 것일까?

시인은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선영에 묻혔다. 이듬해 6월 현대문학사 주관으로 문우와 친지의 뜻을 모아 묘 앞에 시비를 세웠다. 시비는 1991년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1991년 가족들이 뜻을 모아 시인의 묘를 개장하고 시신을 화장한 뒤 시비 아래 묻었다. 그도 하나의 풀포기였다. 그는 죽었어도 그의 시는 영원히 남아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풀처럼 사람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시비를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서원교가 나온다. 다리를 건너 계단을 따라 올라간다. 계곡과 숲에 진달래가 무리지어 피었다. 진달래 산천이다. ‘자운봉’, ‘우이암’, ‘도봉 탐방지원센터’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를 만나면 도봉탐방지원센터 방향으로 간다.

북한산둘레길 18구간인 ‘도봉옛길’ 입구가 나온다. 그곳

부터는 ‘무수골’ ‘북한산둘레길(방학동)’ 이정표를 따른다. 그 길에도 온통 진달래다. 숲길에 피어난 진달래 꽃무리에 햇벌이 든다. 김수영 시인의 시 ‘꽃잎’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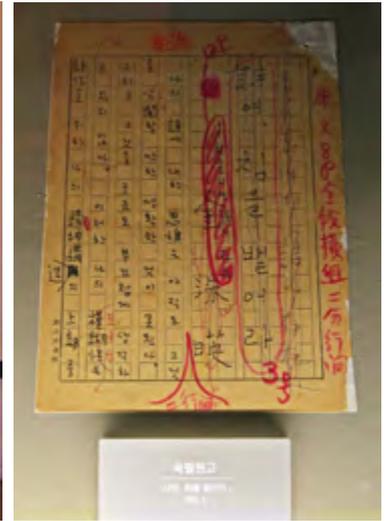
언뜻 보기엔 임종의 생명같고
바위를 뭉개고 떨어져내릴
한 잎의 꽃잎같고
혁명같고
먼저 떨어져내린 큰 바위같고
나중에 떨어진 작은 꽃잎같고
‘꽃잎’ 중 일부

‘하늘에는 그림자가 없듯이’

‘북한산둘레길 도봉옛길’이 끝나는 곳이 무수골이다. 세일교를 건너자마자 좌회전하면 ‘북한산둘레길 방학동길’이 시작된다. 개나리꽃, 벚꽃이 신록과 함께 빛나는 포도밭을 지나면 ‘북한산둘레길 방학동길’이 끝난다. 그곳에 세종대왕의 둘째 딸인 ‘정의공주묘’가 있고 그 주변에 ‘연산군묘’ ‘원당샘’, ‘방학동은행나무’ 등이 모여 있다. 원당샘을 지나 김수영 문학관에 도착했다.



김수영 문학관 전시실 모습. 김수영의 서재를 재현해 놓았다.



김수영 문학관에 있는 시인의 육필 원고

원고지, 서류봉투, 메모장에 써내려간 시인의 육필원고를 보았다. 시인의 서재를 재현한 곳에서 원고를 쓰던 탁자와 생전에 보던 책을 볼 수 있다. 원고지에 쓴 '4.19 시'를 읽는다. 산문 '저 하늘 열릴 때'의 부분도 전시했다.

사실 4.19 때에 나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통일'을 느꼈소 -중략- 하늘과 땅 사이가 온통 '자유독립' 그것뿐입니다. 험빛고 굶주린 사람들이 것처럼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온몸에는 티끌만한 허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은 전부가 바로 '주장'입니다. '자유'입니다...

김수영 시인은 일기처럼 그날 있었던 일을 노트에 적기도 했다. 아침 네 시간 동안 글을 쓰고, 책 읽는 시간은 아침과 오후 도합 네 시간이라는 메모도 했다. '밥 벌기 오후 혹은 밤 네 시간'이라는 문구도 있는데, '밥벌기'는 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업으로 했던 번역 작업을

말하는 것이다. '금연' '금주' '금다'라는 단어 옆에 '합법적인 도적들에게 자진해서 납공을 하지 말아라'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시인의 생활적인 면모와 함께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글쓰기와 책임기에 힘썼던 치열함을 읽는다. 그가 곧 시였다. 그는 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 그를 외쳤던 것이다. 4·19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쓴 그의 시를 읽어본다.

우리들의 싸움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다
민주주의의 싸움이니 싸우는 방법도 민주주의식으로 싸워야 한다

하늘에는 그림자가 없듯이 민주주의의 싸움에도 그림자가 없다

'하... 그림자가 없다' 중 일부 🍵

글·사진 장태동(여행작가)

이제는 동사를 바꾸세요

공문서를 쉽게 쓰기 위해서는 ‘숨겨진 동사를 피해야 한다. 숨겨진 동사란 ‘명사로 둔갑시킨 동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발제를 했다’의 ‘발제’는 ‘토론회나 연구회 따위에서 어떤 주제를 맡아 조사하고 발표함’을 뜻하는 명사지만 발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발제했다’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숨겨진 동사로 볼 수 있다. ‘해결이 되다’와 ‘해결을 하다’의 ‘해결’도 ‘해결되다’와 ‘해결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1) 시민권익위원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3년까지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문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세종시청, 감사위원회 보도자료, 2021. 1. 27.) ⇨ 시민권익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3년까지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문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 (2) 학교수업과의 연계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활용사례로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 보도자료, 2020. 12. 4.) ⇨ 학교수업과의 연계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활용사례로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예문 (1)과 (2)의 ‘활동을 하게’와 ‘평가를 하였다’의 ‘활동’과 ‘평가’는 명사처럼 쓰였지만 본래는 ‘활동하다’와 ‘평가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숨겨진 동사다. 숨겨진 동사를 본래의 형태로 바꾸면 ‘관형사+명사’ 구성이 ‘부사+동사’ 구성으로 바뀔으로써 서술어가 발

달한 우리말답게 문장이 살아난다.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만큼 문제가 되는 것은 동사를 복잡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보조용언과 결합한 동사는 더 감성적이지만 덜 즉각적이어서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문서에는 불필요한 보조용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3) 일본군에 위협적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 독립군의 무장투쟁 과정과 그 활약상을 재조명합니다. (국방부, 국방홍보원 보도자료, 2020. 6. 2.) ⇨ 일본군에 위협적인 존재가 된 우리 독립군의 무장투쟁 과정과 그 활약상을 재조명합니다.
- (4)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 1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추진해오고 있는 만큼, (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 보도자료, 2021. 1. 27.) ⇨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행정명령을 내려 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 1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추진한 만큼,

예문 (3)의 ‘되어버린’은 본용언 ‘되다’ 뒤에 보조용언 ‘버리다’를 덧붙인 말이다. 그런데 보조용언 ‘버리다’는 ‘그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 말하는 이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거나 또는 반대로 부담을 덜게 되었음을 나타낼 때’ 쓰는 말로 문맥상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또 예문 (4)의 ‘추진해오고 있는’은 본용언 ‘추진하다’ 뒤에 보조용언 ‘오다’로도 모자라 ‘있다’를 덧붙인 말인데 의미상 꼭 필요한 말이라고 하기 어렵다. 🍷

글 김형주(상명대 국어문화원 특임교수)

3월 임시국회 개회, 내투기 의혹 관련 국토위 긴급현안 보고 실시

3월 2일

- 3월 임시국회 개회

3월 4일

- 윤석열 검찰총장, 자진 사퇴
- 국민의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2·4부동산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

3월 9일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위 긴급현안 보고에서 일부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투기 사실 확인 시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혀

3월 12일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

3월 14일

- 국민의힘, LH직원들의 투기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내각 총사퇴 요구

3월 16일

- 문재인 대통령,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혀
- 정세균 국무총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도록 백신휴가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

3월 17일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여권 단일 후보로 최종확정

3월 18일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한미 외교장관·국방장관과 회담

3월 19일

- 박병석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을 갖고 현안 논의
- 더불어민주당,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3월 23일

-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꺾고 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후보로 선출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마음을 엄중히 여기고 있다”고 밝혀
- 여야, LH사태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첫 실무협상
- 여야, 농해수위 농협중앙회 업무보고에서 “농민에게 힘이 돼야 할 농협이 오히려 투기 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

3월 24일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후보에서 사퇴하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혀

3월 25일

- 외교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과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 국회, 본회의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 원의 추경정예예산안 처리

정리 윤성혜



국회 ART GALLERY 4월 작품전

올림의 時

2021. 4. 2 - 4. 29

-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 전시품 《자작나무 이야기》 등 회화 15점
- 작가 김연화
- 추천 조수진 의원실
- 문의 국회사무처 문화소통담당관실 02-6788-2296

<편집후기>

꽃소식으로 분주한 4월입니다. 코로나19의 위세가 여전하지만 새봄이 주는 희망과 위로는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모두 함께 온전히 자연을 즐길 수 있을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잘 버티리라 다짐해봅니다.

- 김현아

이달 특집으로 아동학대 재발방지 방안을 다뤘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예방 시스템 등이 좀 더 견고해지면 좋겠습니다.

- 고영선

어김없이 벚꽃이 피었습니다. 올해 서울지역 벚꽃은 최근 100년 사이 가장 일찍 피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예전처럼 벚꽃을 즐길 수는 없지만 활짝 핀 봄처럼 독자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박민선

벚꽃을 빨리 만나 눈은 즐겁지만 지구온난화가 걱정입니다. 저희도 '저탄소, 친환경 국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중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따릉이'도 설치되었습니다. 따릉이 타고 국회로 놀러오세요!

- 윤성혜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민의 소리 국회가 답합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 · 회부



청원서 등록



30일간
100명의 찬성



7일 내
청원요건 검토



공개
(청원요건 충족 시)



30일간
10만명 동의



청원접수 및
위원회 회부



국민동의청원

petitions.assembly.go.kr



국민동의청원

petitions.assembly.go.kr

국회민원지원센터 (02)6788-0081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